

사교육 경감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 '24.8.9. 위촉일 기준

연번	성명	구분	주요 경력
1	성 태 제	위원장	• 現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 前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2	김 건	위 원	• 現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 • 前 국민통합위원회 청년젠더공감특위 위원
3	김 경 성	위 원	• 現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AI전문대학원 원장 • 前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4	김 문 환	위 원	• 現 보개초등학교 교사
5	김 승 욱	위 원	• 現 경북공업고등학교 교사
6	김 영 중	위 원	• 前 상사초등학교 교장 • 前 전라남도교육청 정책기획관
7	김 지 현	위 원	• 現 인천 능내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
8	김 현 구	위 원	• 現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장학사 • 前 대전전민고등학교 교사
9	남궁지영	위 원	• 現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現 한국교육평가학회 이사
10	박 소 영	위 원	• 現 교육바로세우기 운동본부 대표 • 前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11	신 소 영	위 원	• 現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 前 중등학교 및 대안학교 교사, 이투스교육 기획조정실
12	원 윤 희	위 원	• 現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 前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등
13	유 재 원	위 원	• 現 건국대학교 명예교수 • 前 건국대학교 교학부총장, 국제경제학회 회장
14	전 흥 주	위 원	• 現 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前 배재대학교 교수
15	황 규 호	위 원	• 現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 前 교육부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 위원

6

사교육 경감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미래 교육을 위한 중장기
유·초·중등 사교육 경감 방안

6. 사교육 경감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미래 교육을 위한 중장기 유·초·중등 사교육 경감 방안

제시된 정책 대안이나 의견 등은 국가교육위원회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위원들간 논의한 견해를 밝혀둠

I. 사교육 경감 특별위원회 활동 개요

1 사교육 경감의 필요성: 특별위원회 운영의 배경

- 한국은 민주화와 산업화에 모두 성공한 모범적인 국가로서 이러한 성장과 발전에는 교육이 큰 역할을 담당하였음. 우리 교육은, 모든 국민에 대한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높은 수준의 학업성취도, 고등교육의 보편화와 평생교육의 기반 구축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고, 이를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의 밑거름 역할을 담당하였음.
-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은 많은 개선 과제를 안고 있음. 한국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는 과열된 대입 경쟁에 의한 사교육 부담의 문제, 입시 위주 교육에 의한 무기력한 지식교육의 문제, 그리고 학습 격차와 불평등의 심화 문제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여러 문제 중에서도 대입 경쟁과 사교육의 과열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가 피부로 경험하고 있는 현상으로서, 희망이 되어야 할 교육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요인임. 2024년 기준 명목 사교육비 총액은 32.4조 원(영·유아 3.2조 원 + 초·중·고 29.2조 원)으로 GDP(명목 2,556.9조 원)의 1.27%에 달하고 있음. 사교육 참여율은 영·유아 47.6%, 초·중·고 학생 80.0%이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사교육 참여 학생 기준으로 영·유아 33.2만 원, 초·중·고 학생 59.2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통계청·교육부, 2025.03.13.).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은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저출생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사교육은 비용 측면에서도 부담을 주고 있지만, 학생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스스로 학습을 이끌어 가는 자기주도학습 능력 함양을 저해한다는 문제도 안고 있음. 또한 학교 수업에 대한 참여도와 집중도를 낮추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며 정상적인 학교 교육의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

- 그동안 정부는 사교육 경감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음. 교육개혁 방안 중 가장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는 5·31 교육개혁에서도 ‘과외 대책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개혁안의 하나로 제안하고, 학교 교육의 정상화, 지방대학의 집중 육성 및 대입 전형 방식의 정착, 학원 운영 제도의 합리화, 방과후 활동의 확대 제공, 정보통신기술의 최대한 활용, 교육 소비자 운동의 활성화 등 6개 추진 과제를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하였음.
 - 여러 정부에서 이어진 사교육 경감 정책은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근본적인 수준에서는 사교육 과열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사교육의 보편화·일상화·필수화·고액화·조기화 등 부분적으로는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음.
 - 예를 들어, 유아 대상 사교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유명 영어·수학 학원의 입학 레벨테스트 준비를 위한 학원까지 등장하면서 선행학습 연령은 유아기에서 영아기로 낮아지고 있음. 나아가 ‘4세 고시’, ‘7세 고시’와 같은 풍자적 표현이 회자될 정도로 한국의 조기 사교육 열풍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
-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미래 사회의 변화와 미래 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전망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환경에서의 사교육 경감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중장기 국가 교육 발전계획 수립을 담당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함.

2 사교육 경감 특별위원회의 운영 방향과 주요 논의 내용

- 사교육 경감 특별위원회는 사교육 과열 현상을 완화하여 국민의 부담을 덜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 전략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구성함. 주요 목표는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중장기적 관점의 방안을 논의하고 제안하는 것임.
- 사교육 경감 특별위원회는 위원 15명(위원장 성태제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이 위촉되어 임기 1년(2024년 8월 9일부터 2025년 8월 8일까지) 동안 활동함.
- 사교육 경감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2024년 8월 29일 정부서울청사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촉식과 함께 개최되었음.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국가교육위원회 조직 및 현황과 사교육 경감 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안)에 대해 안내받은 후 특위 운영 방향과 회의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제2차 회의는 2024년 9월 23일 정부서울청사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됨. 제2차 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운영과 사교육 경감 방안 보고서 작성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사교육의 원인 분석과 관련하여 돌봄 문제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미래 교육의 변화를 전망하고 그에 따른 사교육의 전개 방향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음. 또한, 교육 측면뿐 아니라 사회·경제 등의 측면에서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대학생의 사교육 문제는 논의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구체화될 경우에 추가로 검토하기로 함.

- 제3차 회의는 2024년 10월 21일 정부서울청사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발제와 토론,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방향 관련 설명과 질의응답이 있었음. ‘입시와 평가 변혁을 통한 사교육 경감’, ‘초·중·고 사교육 의존도 과잉 현상과 완화 방안’에 대한 발제와 관련하여,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여 경감시켜야 하는 사교육의 범위가 무엇인지 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또한, 수업-평가-기록 일체화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학생들에게 평가가 일상화되는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사교육 경감 방안과 같은 정책은 부작용과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책 제안 시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제4차 회의는 2024년 11월 18일 정부서울청사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음. 지난 회의에 이어 특별위원회 위원의 발제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방향 관련 논의가 있었음. ‘사교육 정책의 접근 관점 및 사교육 동향에 기초한 정책 제언’, ‘사교육비 증가 요인 분석 및 경감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가 있었음. 이어진 토론에서 사교육 수요 중에서 맞춤형 교육 등은 공교육이 따라갈 필요가 있지만, 문제 풀이 요령을 가르쳐주는 것과 같은 비교육적인 측면을 공교육이 흡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음. 또한, 대학 입시에서 정시는 공정성의 가치, 수시는 다양성의 가치를 추구하는 만큼, 이 시대에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지에 대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미래에는 디지털 포트폴리오를 통해 수업과 평가를 일체화하고 학생의 성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제5차 회의는 2024년 12월 16일 정부서울청사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됨. 제5차 회의에서는 ‘입시제도 변화에 따른 사교육의 변화’, ‘인구변화·경제발전에 따른 사교육비 추정: 저출산과 저성장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발제가 있었음. 발제에 따르면 성적이 높은 학생 중 사교육을 받는 비율이 높지만, 인과관계로서 사교육이 성적 향상을 가져오는 것인지 아니면 성적이 높으면 사교육을 하는 것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대부분 보충재로 사교육을 이용하는 국가와 달리 한국,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는 경쟁재로 사교육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출혈경쟁이 일어난다는 지적이 있었음. 또한, 공교육 경쟁력

이 강화되면 사교육이 경감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둘의 성격이 서로 다르다고 보는 시각도 있으므로 둘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제6차 회의는 2025년 1월 13일 정부서울청사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됨. 먼저, ‘유아 사교육 문제 분석과 유아 공교육 강화’에 관한 발제에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는 방안은 공교육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음. 또한, 유아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의 필요성과 유아기 적기 교육에 대한 학부모 교육 및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함. ‘공교육 정책이 초등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발제에서는, 교육과정 혁신과 교사 전문성 및 수업의 질을 제고하고 학생 중심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실질적인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함.
- 제7차 회의는 2025년 2월 17일 정부서울청사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됨. ‘유아기 사교육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발제에서는 유아기 사교육 현황 분석 데이터가 축적되어야 하고 양질의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음. 이에 대해 위원들은 영·유아 사교육 문제가 노동시간 감축, 노동조건 개선, 가족지원 정책과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미래의 대학입학전형제도와 사교육비 경감 방안’에 대한 발제에서는,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 부여, 고등학교 내신 평가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AI 활용 평가에 대한 대비 등이 제안되었음.
- 제8차 회의는 2025년 3월 17일 정부서울청사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됨. ‘대입전형 유형별 성취도 비교와 사교육 대책’ 관련 발제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이나 지역균형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정시로 입학한 학생보다 성취도가 높다는 결과를 보였으나 적은 수의 집단을 사례로 하여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른 위원은 이와 정반대의 결과를 보이는 연구도 있으므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중등 교사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교육 발생 원인과 완화 사례: 덴마크 교육과 비교하여’ 발제에서는, 덴마크는 대학 입시경쟁보다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를 탐색하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며, 그 배경에는 높은 세율로 근로자 간 실수령 임금 격차가 크지 않아 특정 직업에 대한 선호가 쏠리는 현상이 없는 사회 분위기가 작용한다고 진단함.
- 제9차 회의는 2025년 4월 21일 프레이저 플레이스 남대문 서울에서 개최됨. ‘초등학교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사교육 경감’에 관한 발제에서, 초등 사교육 발생 원인으로 자녀 돌봄 필요성, 공교육 만족도 저하, 특기·적성 조기 계발 욕구를 들고, 초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우수 초등교사 배치, 영어·예체능 교과와 교과전담교사제 운영과 돌봄 내실화를 위한 지자

체 주관 지역 온종일돌봄지원센터 운영이 제안됨. ‘사교육 경감 정책 분석’ 발제에서는 사교육 경감 정책을 경쟁 부담 관리 중심 접근과 경쟁 내용 관리 중심 접근으로 나누어 살펴봐야 하며, 그 외에 사교육 기관 관리 정책과 학부모 지원 정책들이 부가되어야 한다고 봄. 각 사교육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접근의 필요성과, 대중적 접근보다 경쟁을 심화하는 사회·경제·문화적 배경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기초로 한 근원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함.

- 제10차 회의는 2025년 5월 19일 정부서울청사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됨. 외부 전문가가 ‘현재 사교육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발제하였으며, 발제자는 어떤 정책이 나오든 사교육 시장은 이를 ‘사교육화’하려 하며 이를 위해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조장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특히 수능에 서·논술형 문항을 도입한다면 학교에서는 준비가 안 된 상태이므로 사교육이 호황을 누릴 것이라고 전망함. 또한, 학교 교사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검증된 자격을 갖춘 반면, 강사들의 학위 등은 검증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설명함. 질의응답 과정에서 ‘교수·학습·평가가 일체화되어 학생의 모든 활동을 평가하여 대입에 반영하게 되면 사교육 시장이 대응할 수 있는가?’ 하는 질의에 대해, ‘이를 위해서는 대입 자율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해당 방식은 사교육 시장의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음. ‘사교육 경감을 위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방향성’에 대한 발제에서는, 서·논술형 평가를 비롯한 과정형 평가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사교육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교육·경제·노동·산업계 등 범사회적 협의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제11차 회의는 2025년 6월 16일 정부서울청사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사교육 경감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서 작성 절차와 체제 및 주요 내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보고서 1차 시안을 중심으로 서술의 기본 방향과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위원 간 의견을 조율함.
- 제12차 회의는 2025년 7월 21일 정부서울청사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사교육 경감 특별위원회 보고서 2차 시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음. 일부 논리적으로 비약하거나 과장된 부분들에 대해 수정 의견이 있었으며, 신문이나 방송에서 사용하는 특정 단어들을 가치 중립적 표현으로 순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또한, 사교육 경감을 위한 공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측면에서 교원에 대한 대책을 종합 제언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반면, 초등 교과전담교사제 등의 교원 배치 관련 제언을 다루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지만, 각 학교급별로 교원 정책 문제를 모두 다루는 것은 별도의 연구를 필요로 하며 사교육 외의 문제와도 연계되어 있기에 본 보고서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의견도 있었음.

- 제13차 회의는 2025년 8월 4일 정부서울청사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사교육 경감 특별위원회 보고서 3차 시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음. 최근 영유아 사교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보고서에서는 현재까지 특위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술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또한, 과장된 마케팅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음성화된 과도한 선행학습 사교육을 막기 위해 각 학원의 교육과정 정보를 공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들은 학원에서 거짓된 정보를 공시하여 시스템이 유명무실화되거나 오히려 사교육 기관의 홍보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함. 따라서 해당 대책의 취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중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정리하기로 함. 위원 모두 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동의하며 체제와 편집은 사무처에 위임하기로 함.

< 표 1-2 > 사교육 경감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회차	일시	장소	안건(내용)
1차	'24.8.29. 14:00~16:00	정부서울청사	① 국교위 소개 및 특별위 운영 안내 ② 특별위 운영 방향 논의
2차	'24.9.23. 14:00~16:00	정부서울청사	① 특위 운영 및 사교육 경감 방안 마련 관련 방향 논의
3차	'24.10.21. 14:00~16:30	정부서울청사	① (발제 및 토의) 입시와 평가 변혁을 통한 사교육 경감 ② (발제 및 토의) 초·중·고 사교육 의존도 과잉 현상과 완화 방안 ③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방향 관련 설명 및 질의응답
4차	'24.11.18. 14:00~16:30	정부서울청사	① (발제 및 토의) 사교육 정책의 접근 관점 및 사교육 동향에 기초한 정책 제언 ② (발제 및 토의) 사교육비 증가 요인 분석 및 경감 방안 ③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방향 관련 논의
5차	'24.12.16. 14:00~16:00	정부서울청사	① (발제 및 토의) 입시제도 변화에 따른 사교육의 변화 ② (발제 및 토의) 인구변화·경제발전에 따른 사교육비 추정: 저출산과 저성장을 중심으로
6차	'25.1.13. 14:00~16:00	정부서울청사	① (발제 및 토의) 유아 사교육 문제 분석과 유아 공교육 강화 ② (발제 및 토의) 공교육 정책이 초등 사교육에 미친 영향
7차	'25.2.17. 14:00~16:00	정부서울청사	① (발제 및 토의) 유아기 사교육의 쟁점과 과제 ② (발제 및 토의) 미래의 대학입학전형제도와 사교육비 경감 방안
8차	'25.3.17. 14:00~16:00	정부서울청사	① (발제 및 토의) 대입전형 유형별 성취도 비교와 사교육 대책 ② (발제 및 토의) 중등 교사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교육 발생 원인과 완화 사례: 덴마크 교육과 비교하여
9차	'25.4.21. 14:00~16:00	프레이저 플레이스 남대문 서울	① (발제 및 토의) 초등학교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사교육 경감 ② (발제 및 토의) 사교육 경감 정책 분석
10차	'25.5.19. 14:00~16:00	정부서울청사	① (발제 및 토의) 현재 사교육의 현황과 전망 ② (발제 및 토의) 사교육 경감을 위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계획의 방향성
11차	'25.6.16. 14:00~16:00	정부서울청사	① 사교육 경감 특별위원회 보고서 1차 논의
12차	'25.7.21. 14:00~16:00	정부서울청사	① 사교육 경감 특별위원회 보고서 2차 논의
13차	'25.8.4. 15:00~17:00	정부서울청사	① 사교육 경감 특별위원회 보고서 3차 논의

II. 사교육과 사교육비 현황 진단

1 사교육의 의미와 역사적 변천 및 국제 동향

가. 사교육과 사교육비의 의미

- 사교육은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이외의 장소(학원, 문화센터, 가정 등)에서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참여하는 교육을 의미함.
- 통계청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위해 정의한 사교육의 개념은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을 의미함.
- 사교육의 종류와 범위는 일반교과, 예체능 및 취미·교양 등 과목에 대한 학원수강, 개인 및 그룹과외, 학습지, 인터넷 및 통신강좌와 진로·진학 학습상담 등을 포함함. 단, 학교 내 보충교육(방과후학교 등), EBS 관련 교육, 어학연수는 사교육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 사교육비는 사교육을 받기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함. 학원비, 과외비, 학습지 구입비, 인터넷 및 통신강좌 등의 수강료 지출 비용(교재비 포함)과 진로·진학 학습 상담비를 포함함.

나. 사교육의 역사적 변천

- 사교육은 입시제도와 밀접하게 맞물려 성장해 옴. 사교육의 역사적 변천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1945년 이전) 해방 이전에는 입시제도가 존재하지 않았음. 이 시기에는 비공식적 교육 형태인 야학과 민족계 교육기관 등이 중심이 되어 일제 식민지 교육에 대한 저항과 민족 교육의 일환으로 한글 문해교육이 이루어짐.
- (1945~1960년대) 해방 이후 교육이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학원, 개인교습 형태의 사교육이 등장함. 특히, 1960년대 서울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명문 중학교 입시 준비 사교육이 활발해짐. 1969년 중학교 평준화 정책(무시험 입학제)이 도입되면서, 명문 고등학교 입시 준비를 위한 사교육 형태로 변화 됨. 1954년 국가 단위의 대학 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대학입학연합고사(결과는 미반영)가 처음 실시되면서 본격적인 대입 체제가 시작되었고, 이후 각 대학별로 자체시험과 면접

등을 통해 학생을 선발함(다만, 1962~1963년에는 대학 입학 국가 자격 고시제인 대학 입학 자격고사 적용). 이러한 체제는 상위권 대학 입학을 위한 대학입시 사교육을 자극함.

- (1970년대)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입시 사교육이 서울 외곽으로 확산되기 시작했고, 입시학원이 본격적으로 성장함. 정부는 고등학교 입시경쟁 과열 해소를 위해 1974년 서울, 부산을 시작으로 고교 평준화 정책을 도입하여 중학생 대상 사교육 감소를 위한 전기를 마련함. 그러나 교육 선발의 기능이 학교급별 순차적 선발에서 대학 입학시험을 통한 한 차례 선발로 변화하면서 대학입시에 대한 압력이 확대되었으며, 일류대학에 대한 열망은 과외교습에 대한 관심으로 표출됨. 1969년부터는 대학 입학 자격고사인 대학입학예비고사(1969~1981)와 함께 대학별 본고사 중심의 대입제도가 운영됨. 이 시기에는 본고사 대비 학원이 성행하였고, 사교육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함.
- (1980년대) 군사정부는 1980년 사교육 억제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7·30 과외 금지 조치를 실행하였고, 입시 과목 관련 학원 수강 및 과외를 전면 금지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과외와 음성적인 사교육은 성행함. 이 시기에는 예체능 학원만 제한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음악, 미술, 태권도 학원 등이 활성화되었고, 직접적인 입시 과목이 아닌 속셈학원, 주산학원도 성장함. 한편, 1982년부터는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고교 내신성적을 대학 입학전형 요소로 반영하기 시작했으며, 대학입학학력고사(1982~1993)를 도입하여 대입 전형이 전국 단일시험에 의한 전형 방식으로 전환됨. 학력고사는 대학별 본고사를 대체하면서 공정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동시에 학력고사 대비용 사교육이 확산하는 계기가 됨.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89년에는 대학생 과외와 재학생의 방학 중 학원 수강을 전면 허용하였고, 1991년에는 과외 금지 조치의 실질적 해제라고 할 수 있는 재학생의 학기 중 학원 수강을 전면 허용함. 이를 기점으로 사교육 시장은 급속히 팽창하였으며 이 시기에 초등 고학년 대상 중등 선행학습이 등장하면서 사교육 시작 연령도 낮아지기 시작함.
- (1990년대) 경제 성장과 함께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가하면서 사교육은 더욱 확대됨. 특히, 지역 명문고 진학 대비 학원, 고교 내신 및 학력고사 대비 학원, 초등 저학년 대상 선행학습 시장 등이 본격화됨. 1994년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획기적 도입과 함께 대학별고사가 부활하면서 수능 및 논술 대비 사교육이 새롭게 부상함. 통합교과적으로 출제된 수능, 대학의 논술 등 학교 교육을 통해 준비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대입에 반영되면서 사교육은 더욱 번성하기 시작함.
- (2000~2010년대)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0년에는, 그동안 명목상으로나마 유지되고 있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제3조 과외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면

위헌판결을 내림에 따라 모든 사교육의 정당성과 자율성이 확보됨. 이후 공교육은 발상을 전환하여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교육 수요를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펴기 시작함. 대입 정책에서는 국·영·수 중심의 신입생 선발 정책에서 탈피하여 적성 중심의 학생 선발을 강조하면서 하나만 잘해도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는 정책을 홍보하였음. 2002년 고교 내신 수행평가제도가 도입되고, 수시·정시전형 등 대입제도가 다양화되면서 사교육도 세분화·전문화되기 시작함. 입학사정관제도를 이용한 수시전형은 학생부 중심의 학생 선발로서 학생부의 내용과 자기소개서 그리고 추천서가 입학의 결정 요소였으며, 정시는 수능 점수가 주된 전형 요소가 됨. 이러한 변화는 대학 입학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전형 요소의 다양화로 인해 학생들의 입시 부담이 가중됨. 수능, 내신, 논술, 자기소개서, 면접 등 전형 요소별 맞춤형 입시 사교육은 물론 입시 컨설팅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교육도 등장함. 특히, 2007년부터는 정시(48.5%)보다 수시(51.5%) 모집 비율이 더 높아지면서 수시 중심의 입시 구조가 본격화되었고, 학생부종합전형이 수시전형에서 주요한 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학교생활기록부 관리를 위한 사교육(봉사활동 대행, 동아리 코칭, 포트폴리오 작성 등)이 증가함. 또한, 조기교육 열풍이 불며 유아 대상 영어·수학 선행학습 시장이 급격히 확대됨. 특히, 2001년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교육이 도입되면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사교육의 시작 연령이 유아기까지 하향화됨.

- (2020년대~현재) 학생부 기재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수시전형에서 자료의 공정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학생부의 기재 내용을 대폭 축소하면서, 수시전형은 유지하되 수능에 의존한 정시 모집을 확대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학교 교육의 충실한 참여보다는 수능 준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수능 대비 사교육이 번성함.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입시 전략이 더욱 다양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사교육도 수능·내신·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진로설계·학점관리전략 등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고 있음. 또한, 입시 컨설팅은 고가의 프리미엄 사교육 상품으로 자리 잡음. 최근,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유명 영어·수학 학원의 입학 레벨 테스트 준비를 위한 학원까지 등장하면서 선행학습 참여 연령이 유아기에서 영아기로 낮아지고 있음. 나아가 ‘4세 고시’, ‘7세 고시’와 같은 풍자적 표현이 나타날 정도로 한국의 조기 사교육 열풍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

다. 사교육의 국제 동향

- 영·유아 대상 학습 사교육은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유럽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움(김은영 외, 2017).

- 일본, 대만 등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의 영·유아 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미국의 학생들은 사교육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으나, 영·유아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인프라(YMCA 등)를 중심으로 한 예체능 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북유럽에서는 유아 대상 사교육을 찾아보기 어렵고, 다만 스포츠 클럽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음.
- 사교육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성행하였으나, 1990년을 전후로 유럽 전역, 2000년 이후에는 북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 지역까지 확대된 보편적인 사회현상임(박명희·백일우, 2020).
 - 사교육 참여율은 1인당 국민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지만, 국민소득과 관계없이 다수의 국가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지역별로는 아프리카(71.5%), 동유럽(66.3%), 아시아 선진국(61.2%), 서·북유럽(46.5%), 아시아 개도국(43.6%), 북아메리카(29.4%), 오세아니아(20%) 순임.
 - 동아시아는 싱가포르(초·중 97.0%), 한국(초·중·고 71.7%), 중국(초·중·고 64.3%), 베트남(초·중·고 54.7%), 인도(지역 평균 41.9%), 일본(초·중 39.7%), 파키스탄(지역 평균 36.5%), 홍콩(초·중 36.4%), 북한(대도시 25.0%) 순임.
 - 부모의 소득 수준과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고 있으며, 최상위 계층과 최하위계층 간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베트남 30배, 방글라데시 22배, 일본 10배, 미국 10배, 한국 9배, 중국 3~4배).
- 아시아 지역의 경우 사교육의 확산에는 자녀의 학문적 성취를 가정과 가문의 자랑거리로 인식하는 유교문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맹모삼천지교’).
 -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열악한 교육재정으로 공교육이 부실하고 학교 교사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사교육을 강요함.
 - 동유럽 지역은 1990년대 사회주의 몰락과 함께 변화된 시스템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교육을 확대함. 학교 교사들이 사교육 공급 확대에 영향을 미침.
 - 서·북유럽 지역에서는 취약계층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는 사교육의 수요 및 공급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북아메리카 지역은 경쟁 문화, 학부모들의 교육열, 신자유주의 사상의 확산이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킴. 미국의 경우에는 상류층이나 인도, 한국, 베트남 이민자 사회를 중심으로 사교육이 번성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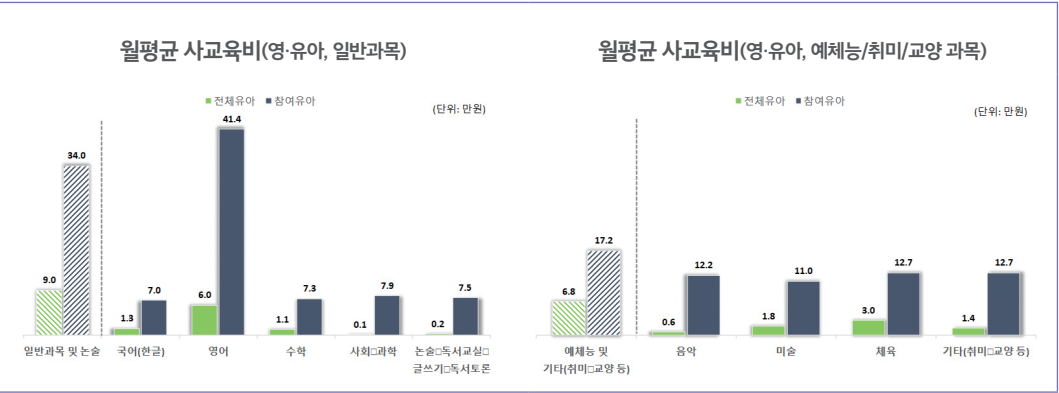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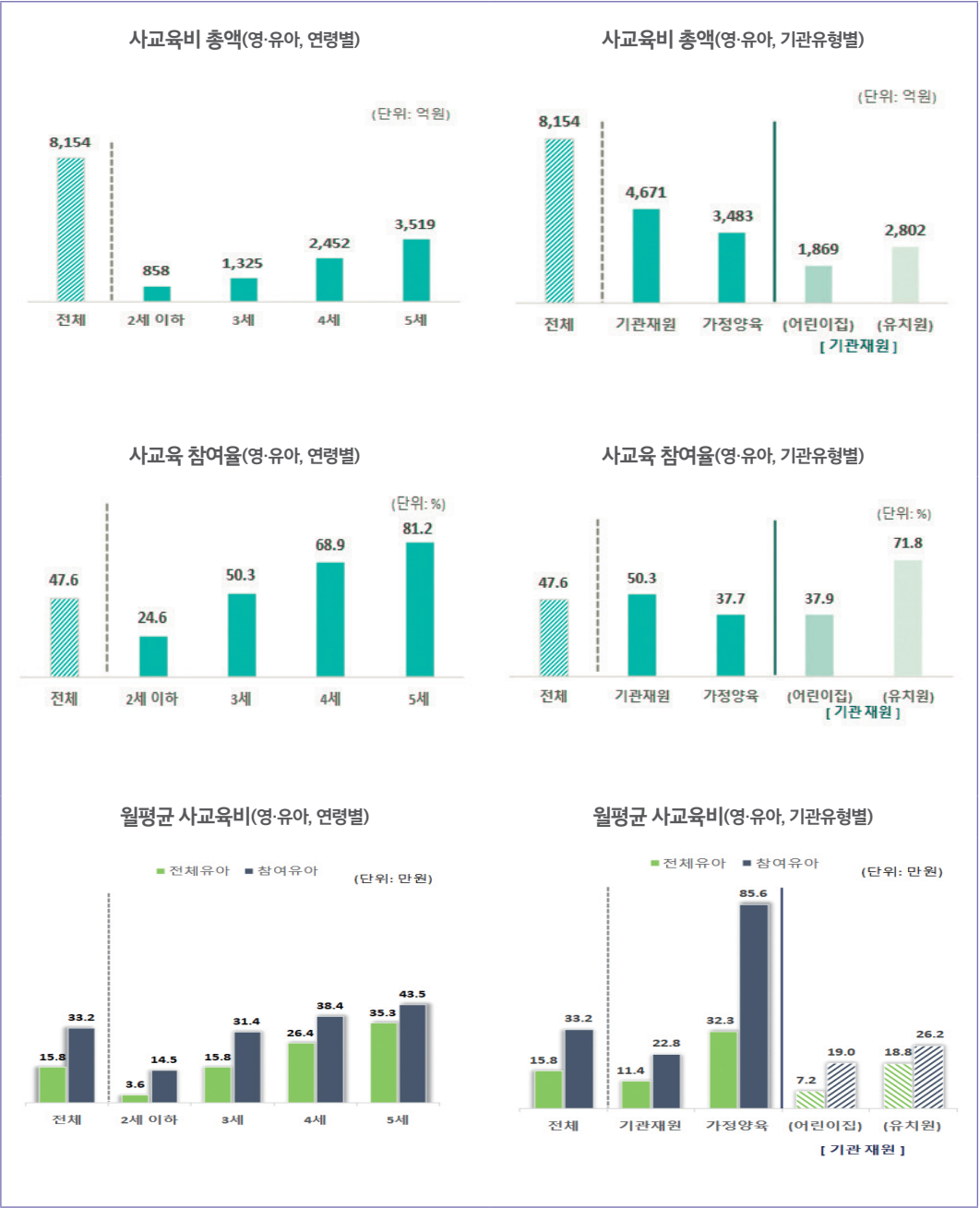
2 사교육과 사교육비의 변화 추이 및 현황

가. 영·유아 시기

- (사교육비 총액) 영·유아 사교육비 총액은 2024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8천154억 원으로, 이를 연으로 환산하면 약 3조2천억 원임(통계청·교육부, 2025.03.13.).
 - 기관 재원 유아(136.2만 명)의 사교육비 총액은 4천671억 원, 가정 양육 유아(36만 명)의 사교육비 총액은 3천483억 원이며, 유아 연령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총액이 증가함.
- (사교육 참여율) 6세 미만 영·유아의 전체 사교육 참여율은 47.6%임.
 - 기관 재원 유아의 50.3%, 가정 양육 유아의 37.7%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유아 연령이 높을수록(2세 이하 24.6% → 5세 81.2%), 가구소득이 높을수록(300만 원 미만 29.5% → 800만 원 이상 62.4%) 참여율이 증가함.
- (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 유아 기준으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2만 원임.
 - 기관 재원 유아의 1인당 사교육비는 22.8만 원, 가정 양육 유아는 85.6만 원이며, 유아 연령이 높을수록(2세 이하 14.5만 원 → 5세 43.5만 원), 가구소득이 높을수록(300만 원 미만 4.8만 원 → 800만 원 이상 32.2만 원) 사교육비가 증가함.
 - 특히, 유아 대상 반일제 이상(3시간 이상) 학원에 참여하고 있는 가정 양육 유아의 1인당 사교육비가 145.4만 원으로 나타남. 반일제 학원 유형 중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의 월평균 비용이 154.5만 원으로 가장 높고, 놀이학원 116.7만 원, 예능학원 78.3만 원, 체육학원 76.7만 원의 순임.
 - 과목별 1인당 사교육비를 살펴보면, 사교육 참여 유아 기준으로 일반과목은 월평균 34.0만 원이며, 영어(41.4만 원), 사회·과학(7.9만 원), 논술·독서교실·글쓰기·독서토론(7.5만 원) 순으로 많이 지출함. 예체능 및 취미·교양 과목은 월평균 17.2만 원이며, 체육(12.7만 원), 기타 취미·교양(12.7만 원), 음악(12.2만 원), 미술(11.0만 원) 순으로 많이 지출함.
 - 영·유아 사교육비 실태 조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3)에 따르면, 만5세 유아의 49.2%가 연간 3과목 이상의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음(5과목 이상 11.1%).
- (수강목적) 일반과목의 수강목적은 입학 준비(67.6%), 재능 계발 및 진로 탐색(53.8%), 불안 심리(41.0%), 돌봄(9.8%), 사회성 발달(6.5%), 놀이(5.5%) 순으로 나타남. 예체능 및 취미·교양 과목의 수강목적은 재능 계발 및 진로 탐색(60.3%), 문화예술적 감수성 함양

(50.1%), 사회성 발달(23.8%), 돌봄(18.2%), 놀이(17.9%), 입학 준비(10.1%), 불안 심리(7.6%) 순임(통계청·교육부, 2025.03.13.).

[그림 II-1] 영·유아 사교육비 총액, 참여율 및 사교육비 현황(2024)



출처: 2024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통계청·교육부)

나. 초등학교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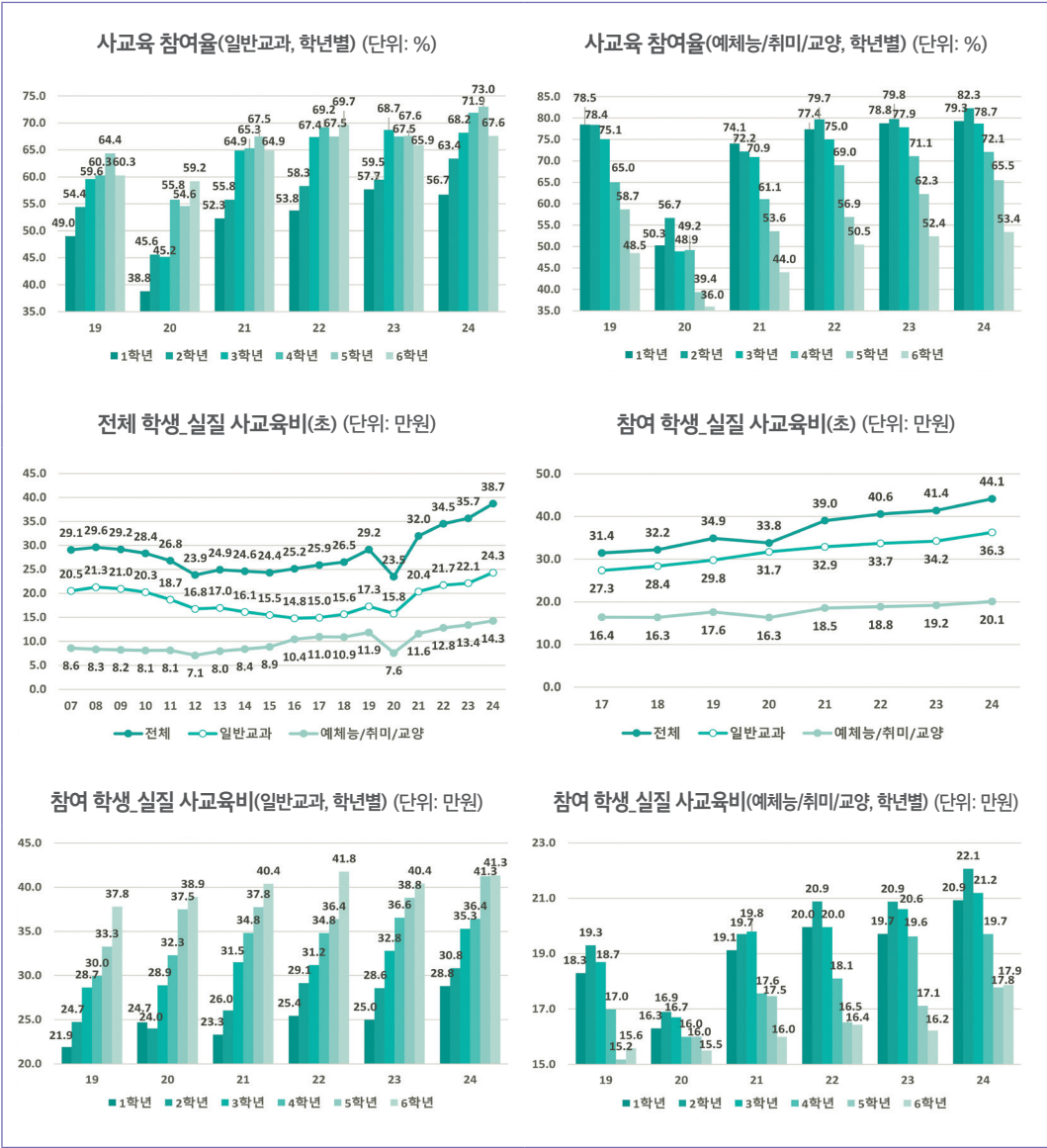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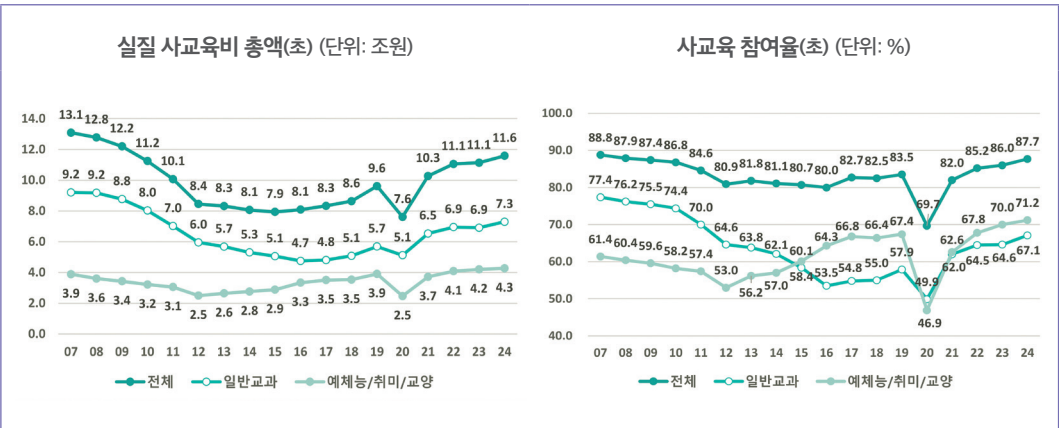
- (사교육비 총액) 초등학교 실질 사교육비 총액은 2012년까지 급격히 감소한 후 2015년까지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매년(2020년 제외) 증가하고 있음(2015년 7조9천억 원 → 2024년 11조6천억 원).
 - 특히, 일반 교과목의 경우, 2016년까지 사교육비 총액의 감소 추세가 두드러졌으나 그 이후로 급증하는 경향임. 예체능 및 취미·교양 과목의 경우에는 2012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음.
 - 국민소득(GDP 및 가계총처분가능소득) 대비 사교육비 지출 비중도 2007년 0.90%에서 2016년 0.42%로 하락하였으나, 이후로는 증가 추세임(2020년 제외).
- (사교육 참여율) 전체 교과 사교육 참여율은 2007년 88.8%에서 2016년 80.0%로 감소하였으며, 2017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임(2024년 87.7%).
 - 일반 교과 사교육 참여율은 2007년 77.4%에서 2016년 53.5%로 급감하였으나 2017년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24년 67.1%로 나타남. 예체능 및 취미·교양 과목은 2012년(53.0%)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급감하였으나 다시 증가하는 경향임(2024년 71.2%).
 - 일반 교과에서는 영어, 수학 과목의 참여율이 높고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영어 참여율(49.7% → 54.9%)이 수학 참여율(48.7% → 52.5%)보다 더 높은 현상이 지속됨. 예체능 교과에서는 체육, 음악, 미술 순으로 참여율이 높으며, 특히 체육은 2020년 이후 2024년까지 꾸준한 상승(27.3% → 51.2%)을 보임.
 - 일반 및 예체능 교과 모두 학원 수강 유형이 가장 많고, 비율 또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 꾸준히 증가함(일반 교과 학원 수강 비율 증가: 31.3% → 51.2%). 일반 교과의 경우 2021년부터 방문학습지, 개인/그룹과의 비율이 감소하고, 2020년 이후부터 유료 인터넷 및 통신강좌 등의 참여 비율이 두 자릿수로 상승함(2020년 7.0% → 2021년 이후 11.6%~13.4% 수준). 예체능의 경우 과목 특성상 직접 대면 형식의 학원 수강 비율(2024년 63.8%)이 절대적으로 높고 다른 유형은 7% 이하의 낮은 비율 범위에 머물고 있음.

- 학년에 따른 교과별 사교육 참여 추이 및 경향을 살펴보면, 일반 교과는 3~6학년 시기에, 예체능 및 취미·교양 과목은 1~3학년 시기에 사교육 참여율이 높으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

-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 학생의 전체 교과 실질 사교육비는 2017년 31.4만 원에서 2024년 44.1만 원으로 증가함.
 - 사교육 참여율과 마찬가지로 전체 학생을 기준으로 한 일반 교과 실질 사교육비는 2016년까지 감소하다가 2017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예체능 및 취미·교양 과목은 2012년 이후 증가세를 보임.
 - 일반 교과는 4~6학년 시기에, 예체능 및 취미·교양 과목은 1~3학년 시기에 실질 사교육비가 높은 경향을 보이며, 가구소득이 높고 지역 규모가 클수록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함.
- (수강목적) 2024년 기준 일반 교과의 수강목적은 학교 수업 보충(84.0%), 선행학습(40.3%), 보육(21.3%), 진학 준비(10.8%), 불안 심리(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예체능 및 취미·교양 과목의 수강목적은 취미, 교양, 재능 개발(91.6%), 보육(25.4%), 친구를 사귀기 위하여(10.6%), 학교 수업 보충(7.1%), 진학 준비(4.7%) 등의 순임(KOSIS 국가통계포털).

[그림 II-2] 초등학교 사교육비 총액, 참여율 및 사교육비 변화(2007~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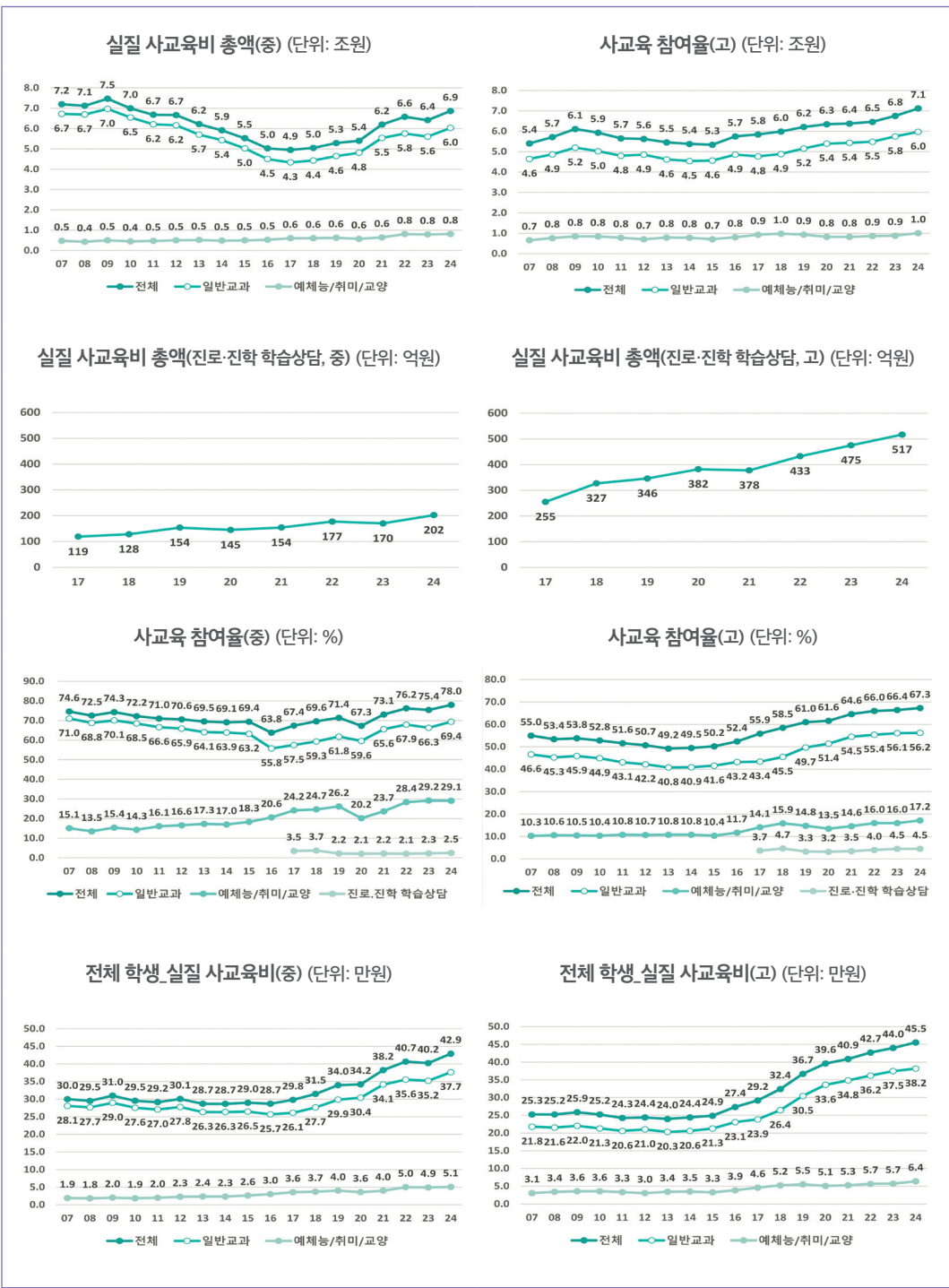
주: 실질 사교육비 = 명목 사교육비/CPI×100, CPI(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기준
출처: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통계청·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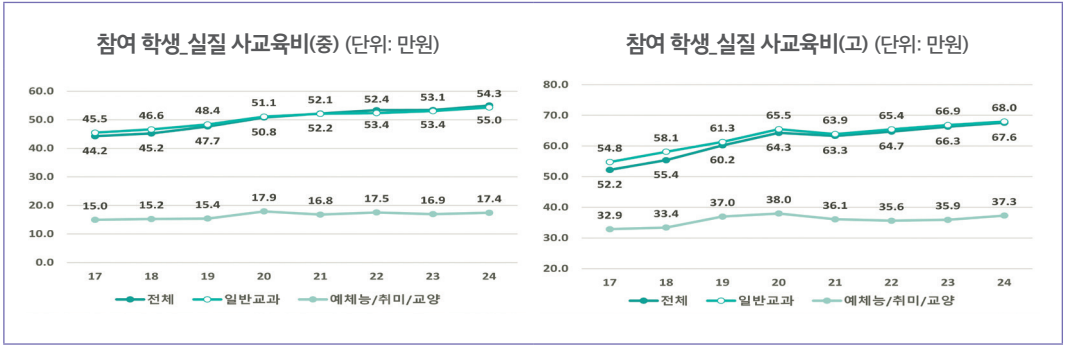
다. 중·고등학교 시기

- (사교육비 총액) 중·고등학교 실질 사교육비 총액은 2009년 이후부터 감소 경향을 보이다가 중학교는 2017년 이후, 고등학교는 2015년 이후부터 급증하고 있음(중학교: 2017년 4조9천억 원 → 2024년 6조9천억 원, 고등학교: 2015년 5조3천억 원 → 2024년 7조1천억 원). 일반 교과 관련 실질 사교육비 총액도 전체 교과와 동일한 추세로 나타남.

- 특히, 이 시기에는 진로·진학 학습 상담 관련 실질 사교육비 총액도 증가 추세이며(중학교: 2017년 119억 원 → 2024년 202억 원, 고등학교: 2017년 255억 원 → 2024년 517억 원), 중학교 대비 고등학교 시기에 진로·진학 관련 사교육비 총액 규모가 더 큰 경향을 보임.
- 국민소득(GDP 및 가계총처분가능소득) 대비 사교육비 지출 비중은 중학교의 경우, 2007년 0.49%에서 2016년 0.25%로 하락한 이후 매우 완만한 상승세를 보임.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음.
- (사교육 참여율) 전반적으로 고등학교보다 중학교 시기에 사교육(일반 교과, 예체능 및 취미·교양)에 더 많이 참여함.
 - 중학교는 2016년부터, 고등학교는 2013년 이후로 전체 교과(중학교: 2016년 63.8% → 2024년 78.0%, 고등학교: 2013년 49.2% → 2024년 67.3%) 및 일반 교과 사교육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 중학교는 예체능 및 취미·교양 관련 사교육 참여율도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임.
-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은 고등학교 대비 중학교 시기에 더 높지만, 사교육 참여 학생 기준으로 1인당 월평균 실질 사교육비는 고등학교 시기에 더 높음.
 - 사교육 참여율과 마찬가지로 전체 학생을 기준으로 한 일반 교과 실질 사교육비는 중학교의 경우 2016년 이후, 고등학교의 경우 2013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사교육 참여 학생의 전체 교과 실질 사교육비는 중학교의 경우 2017년 44.2만 원에서 2024년 55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고등학교는 2017년 52.2만 원에서 2024년 67.6만 원으로 증가함. 중·고등학교 모두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지역 규모가 클수록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더 크고, 성적이 높은 고등학생이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경향을 보임.
- (수강목적) 2024년 기준 일반 교과의 수강목적은 학교 수업 보충(중: 87.2%, 고: 78.7%), 선행학습(중: 42.5%, 고: 28.4%), 진학 준비(중: 25.9%, 고: 50.9%), 불안 심리(중: 6.1%, 고: 5.5%) 등으로 나타남. 예체능 및 취미·교양 과목의 수강목적은 취미, 교양, 재능 계발(중: 87.8%, 고: 50.2%), 진학 준비(중: 19.1%, 고: 64.7%), 학교 수업 보충(중: 4.7%, 고: 7.7%), 친구를 사귀기 위하여(중: 7.9%, 고: 2.8%) 등임(KOSIS 국가통계포털).

[그림 II-3] 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 참여율 및 사교육비 변화(2007~2024)





주: 실질 사교육비 = 명목 사교육비/CPI×100, CPI(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기준
출처: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통계청·교육부)

라. 저출생과 저성장에 따른 사교육비 변화 전망

- 저출생과 저성장이 향후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몇 가지 시나리오별로 추정함.
 - (합계출산율 시나리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3.12.14.)에 따르면 장래 합계출산율에 대하여 다음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음.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5년 4월 기준으로 0.79명을 기록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OECD 평균(2022년 기준 1.51명) 수준으로의 반등은 예상하기 어려움.

< 표 II-1 > 합계출산율 시나리오(2023~2035) (단위: 가임여성 1명당)

연도	높은 출산율 (F1)	중간 출산율 (F2)	낮은 출산율 (F3)
2023	0.73	0.72	0.71
2024	0.70	0.68	0.67
2025	0.75	0.65	0.63
2026	0.80	0.68	0.59
2027	0.84	0.71	0.61
2028	0.89	0.75	0.63
2029	0.93	0.78	0.65
2030	0.98	0.82	0.67
2031	1.03	0.85	0.69
2032	1.07	0.88	0.70
2033	1.12	0.92	0.72
2034	1.16	0.95	0.74
2035	1.21	0.99	0.76

출처: 통계청(2023.12.14.)

- (성장률 시나리오) 한국의 성장률은 향후 지속적으로 하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최근 한국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2026~2030년 기간 중 잠재성장률이 1%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됨. OECD는 2025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9%로 전망함(서울경제, 2025.07.08.). 생산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을 기대하기 힘든 만큼 중간이나 낮은 생산성 시나리오가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됨.

< 표 II-2 > 성장률 시나리오(2021~2040)

기간	높은 성장률 (G1)	중간 성장률 (G2)	낮은 성장률 (G3)
2021~2025	2.7	2.7	2.6
2026~2030	2.1	1.9	1.6
2031~2035	1.3	1.1	0.9
2035~2040	0.6	0.5	0.3

출처: 조태형(2023.12)

- 시나리오별 사교육비 비율의 추정 결과는 <표 II-3> ~ <표 II-5>와 같음. 기준시점인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GDP 비율은 1.12%를 기록함. 출산율과 성장률의 중간 시나리오를 채택할 경우, 사교육비 비율은 2025년 1.21%에 달한 이후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2035년 0.87%). 한편, 출산율과 성장률이 더 낮을 것으로 가정할 경우, 사교육비/GDP 비율은 2029년 1.25%에 달한 이후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2035년 1.07%). 마지막으로 최근 합계출산율 추이(2023년 0.72명 → 2024년 0.75명 → 2025년 4월 기준 0.79명)를 고려하여 높은 출산율과 중간 성장률을 가정하면, 사교육비/GDP 비율은 2025년 1.13%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2035년에는 0.68%).
 - 성장률보다 출산율 변화가 GDP 대비 사교육비 비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줌. 출산율이 반등하면 3~4년 후까지 사교육비 지출은 증가하다가 이후 서서히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저성장은 가계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교육비 지출 비율이 감소할 것임. 사교육이 정상재라면 소득 감소는 사교육에 대한 수요 감소로 나타날 것임. 저소득층에 미치는 충격이 더 커서 저소득층부터 사교육비 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표 II-3 > GDP 대비 사교육비 비율 추정: 중간 출산율+중간 성장률(2025~2035)

연도	중간 출산율 (F2)	중간 성장률 (G2)	종합 (F2+G2)
2025	1.19	1.15	1.21
2026	1.17	1.14	1.18
2027	1.14	1.14	1.15
2028	1.10	1.14	1.12
2029	1.07	1.14	1.09
2030	1.04	1.14	1.05
2031	1.01	1.12	1.00
2032	0.98	1.12	0.97
2033	0.94	1.12	0.94
2034	0.92	1.12	0.91
2035	0.88	1.12	0.87

< 표 II-4 > GDP 대비 사교육비 비율 추정: 낮은 출산율+낮은 성장률(2025~2035)

연도	낮은 출산율 (F3)	낮은 성장률 (G3)	종합 (F3+G3)
2025	1.20	1.15	1.22
2026	1.24	1.13	1.25
2027	1.22	1.13	1.23
2028	1.20	1.13	1.21
2029	1.18	1.13	1.19
2030	1.17	1.13	1.17
2031	1.15	1.12	1.13
2032	1.14	1.12	1.12
2033	1.12	1.12	1.11
2034	1.10	1.12	1.09
2035	1.08	1.12	1.07

< 표 II-5 > GDP 대비 사교육비 비율 추정: 높은 출산율+중간 성장률(2025~2035)

연도	높은 출산율 (F1)	중간 성장률 (G2)	종합 (F1+G2)
2025	1.11	1.15	1.13
2026	1.06	1.14	1.08
2027	1.03	1.14	1.04
2028	0.98	1.14	1.00
2029	0.94	1.14	0.96
2030	0.90	1.14	0.91
2031	0.85	1.12	0.84
2032	0.82	1.12	0.81
2033	0.77	1.12	0.76
2034	0.73	1.12	0.72
2035	0.69	1.12	0.68

3 사교육의 유형과 발생 원인

가. 유아교육 시기의 사교육 유형과 발생 원인

- 유아교육 시기의 사교육 유형과 발생 원인은 그 목적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눌 수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이를 ‘돌봄 수요에 의한 사교육’과 ‘입시경쟁을 위한 조기 사교육’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함. 이 두 유형은 각각 사회적 맥락과 부모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상호 중첩되기도 하면서 유아의 일상생활과 발달 전반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침.

1) 돌봄 수요에 의한 사교육

- 유아기에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돌봄 수요에 의한 사교육 유형은 태권도, 피아노, 미술, 발레, 축구 등과 같은 예체능 학원임.
 - 이러한 사교육은 유아의 방과후 돌봄과 신체적·정서적 발달, 그리고 잠재된 재능 발견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됨.
- 돌봄 수요에 의한 유아 사교육의 주요 발생 원인 중 하나는 가정 내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필요성임.

- 특히 맞벌이 가정의 경우 긴 근무시간과 가사 노동 부담, 육아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인해 부모가 일하는 동안 아이들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돌보는 것이 어려운 현실임.
- 부모들은 개인적·직업적 생활의 연속성 유지와 가정 내 여가와 휴식을 위해 사교육을 찾음. 이와 같은 사교육은 단순한 놀이 또는 학습 활동이 아니라, 일하는 부모의 돌봄 공백을 메우는 ‘대체 돌봄 서비스’ 역할도 수행함.
- 돌봄 수요에 의한 유아 사교육의 또 다른 주요 발생 원인으로는 질 높은 돌봄 인프라의 부족이 있음.
 - 현재 공공 유아 돌봄 인프라는 매우 열악하며, 지역에 따라서는 양질의 유아 돌봄 서비스가 부족한 경우도 있음. 지역사회의 적절한 돌봄 인프라가 미비한 경우 부모들은 돌봄 수요 해결을 위해 사교육 등에 의존하게 됨.

2) 입시경쟁을 위한 조기 사교육

- 입시경쟁을 위한 유아 조기 사교육 유형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 수학·사회·과학 선행학습, 논술·독서교실·글쓰기·독서토론 학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 만 3, 4세부터 시작하는 영어 조기교육 학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일명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대상 시험이 성행하면서 유아 조기 사교육 시장에 대한 수요가 크게 높아지고 있음.
 - 유아 대상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은 속칭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며, 부모들이 이를 조기 사교육 학원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부모들은 큰 비용을 지불하였으니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는 경우도 많음.
 - 유아 대상 반일제 이상 학원의 문제점으로는, 영·유아기 특성에 맞지 않는 수업방식(빡빡한 시간표, 교사 주도의 반복, 워크북 풀기)과 유아교육기관과는 다른 환경(책상에 앉아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냄), 영·유아기에 반드시 경험해야 할 경험(흥미와 호기심을 가진 대상에 몰입하는 경험)의 부재와 정서적 요구 충족의 어려움 등이 있음(김은영, 2025).
 - 겉보기에는 놀이 중심의 수업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유아의 자발성과 흥미에 기반한 진정한 의미의 놀이가 아닌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됨. 또한 기본생활습관 지도, 안전 문제, 수업 방식 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 입시경쟁을 위한 유아 조기 사교육의 주요 발생 원인 중 첫째는, 경쟁 사회 속에서 자녀가 뒤처지지 않도록 조기에 우위를 점하려는 부모들의 불안감과 경쟁 심리에 있음.

- 현대의 경쟁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일부 부모들은 유아기부터 입시 준비를 시작해야만 자녀가 ‘앞서 나갈 수 있다’고 믿음. 이에 따라 유아기부터 주요 교과 과목을 자녀에게 조기 학습시켜 향후 입시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자 함. 이러한 기대 속에서 유아기부터 이루어지는 조기 학습에 대한 수요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유아 대상 사교육 시장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조기 사교육은 유아교육기관 외부뿐 아니라, 유아교육기관 내에서 운영되는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유치원에서 운영되는 방과후 과정은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놀이 중심·쉽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에서는 특성화 프로그램에 사교육적 요소가 포함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 나아가 일부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지침에 어긋나게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도 학습 중심 활동이나 선행 학습 성격의 수업을 실시하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음.
- 입시경쟁을 위한 유아 조기 사교육의 발생 원인 두 번째는 국가 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의 유아중심·놀이중심 교육 철학에 대한 부모들의 이해 부족과 오해임.
 - ‘유아기에는 자발적인 놀이와 체험을 통한 배움이 중요하다’는 교육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정규 유아교육기관에서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오해와 편견은 유아교육의 본질과 방향성을 왜곡시키며 조기 경쟁 심화를 부추기고 있음.
- 입시경쟁을 위한 유아 조기 사교육의 주요 발생 원인 세 번째는, 유아 대상 사교육업체의 과도한 마케팅 및 ‘조기교육은 필수’라는 사회적 분위기로, 이는 부모들의 기대와 불안을 더욱 자극함.
 - 유아 대상의 조기 사교육이 만연한 배경에는 업체들의 과도한 마케팅 전략이 있음. 많은 사교육업체들이 ‘조기유학’, ‘조기 입시 준비’, ‘앞서나가는 우리 아이’ 등의 메시지로 부모들의 기대와 불안을 자극함. 특히 영어학원이나 조기 시험기관들은 ‘아이의 성공을 위한 필수 선택’이라는 분위기를 부추기며, 조기교육이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인식되도록 유도함.
 -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유아기부터 조기 사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확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아기부터 조기 입시 준비에 뛰어드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면서 조기 경쟁이 만연하고 있음.

나. 초등교육 시기의 사교육 유형과 발생 원인

- 초등교육 시기의 사교육 유형은 과목별 유형(일반교과/예체능교과)과 참여유형(학원수강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이 외에도 초등학생의 발달 단계, 학부모의 기대, 사회적 분위기 등에 따른 다양한 사교육 유형이 존재함. 학생들은 교과보충형, 선행교육형, 예체능 및 특기 계발형, 입시 대비형, 돌봄 대체형, 외국어 습득형과 같이 개인의 목적에 맞는 다양한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음.
- 초등 사교육의 발생 양상은 단순히 ‘학습’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사교육의 원인을 교육 외적인 요소(돌봄)와 교육시스템, 사회문화적·심리적 요인에 걸쳐 입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사교육 경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좀 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임.

1) 돌봄 수요에 의한 사교육

- 중·고등학교와 다르게 초등 사교육의 수강목적에는 ‘돌봄’ 수요가 존재함.
-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는 현대 사회에서 자녀의 방과 후 시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이 확보되고 시간 관리에 유리한 사교육을 이용함. ‘돌봄’을 전제로 ‘학교 수업의 보충’이나 ‘선행학습’ 등의 일반 교과나 ‘취미·교양·재능 계발’ 등의 예체능에서 개인이 희망하는 영역의 사교육을 이용하게 됨.

2) 입시경쟁을 위한 사교육

- 자녀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심리적 요인과 경쟁 및 불안을 조장하는 사회 분위기에 의해 입시경쟁을 위한 사교육이 초등학교 시기에도 발생하고 있음.
- 1999년부터 2021년까지 실시된 설문 조사에서 사교육을 시키는 가장 큰 이유로 ‘남들이 하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를 선택함(<표 II-6> 참조).

< 표 II-6 >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1999~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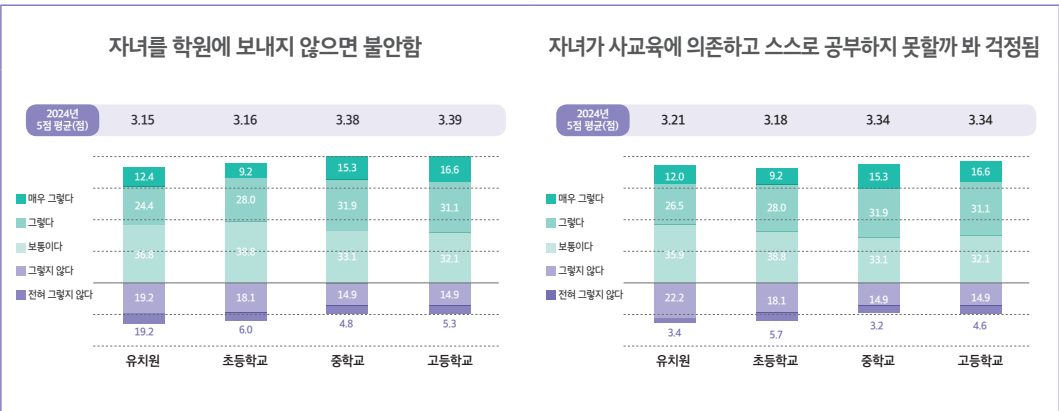
(단위: 명(%))

사교육을 시키는 가장 큰 이유	2021		2020		2019		2018	2017	2001	1999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전체	초·중·고 학부모				
사교육을 하지 않으면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해서	979 (14.8)	219 (18.5)	1,132 (13.5)	266 (15.3)	1,103 (14.8)	277 (17.9)	584 (14.8)	592 (15.9)	316 (24.9)	339 (22.5)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1,275 (19.2)	237 (20.0)	1,440 (17.2)	319 (18.4)	1,310 (17.6)	270 (17.4)	567 (14.4)	547 (14.7)	333 (26.3)	337 (22.4)
남들보다 앞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	1,549 (23.4)	218 (18.4)	2,133 (25.4)	387 (22.3)	1,832 (24.6)	317 (20.5)	935 (23.7)	897 (24.1)	-	-
남들이 하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1,613 (24.3)	258 (21.8)	2,214 (26.4)	407 (23.4)	1,740 (23.3)	324 (20.9)	1,049 (26.6)	1,013 (27.2)	386 (30.5)	512 (34.0)
특기·적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431 (6.5)	88 (7.4)	495 (5.9)	125 (7.2)	446 (6.0)	99 (6.4)	195 (4.9)	198 (5.3)	104 (8.2)	235 (15.6)
방과후 집에서 공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439 (6.6)	86 (7.3)	537 (6.4)	102 (5.9)	600 (8.1)	122 (7.9)	324 (8.2)	267 (7.2)	57 (4.5)	84 (5.6)
자녀가 혼자서는 공부를 하지 않아서	332 (5.0)	74 (6.3)	415 (4.9)	128 (7.4)	398 (5.3)	129 (8.3)	273 (6.9)	198 (5.3)	62 (4.9)	-
기타	12 (0.2)	4 (0.3)	21 (0.3)	4 (0.2)	23 (0.3)	10 (0.6)	14 (0.4)	15 (0.4)	9 (0.7)	-
계	6,630 (100.0)	1,184 (100.0)	8,387 (100.0)	1,738 (100.0)	7,452 (100.0)	1,548 (100.0)	3,941 (100.0)	3,727 (100.0)	1,267 (100.0)	1,507 (100.0)

출처: 임소현 외(2021). p.186.

-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학부모는 한편으로 ‘자녀를 학원에 보내지 않으면 불안’하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녀가 사교육에 의존하고 스스로 공부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불안과 걱정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 단계보다 중·고등학교 단계에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II-4] 참조).

[그림 II-4] 학부모의 사교육 관련 불안 정도(2024)



출처: 권순형 외(2024). p.161.

- 주요 과목(영어, 수학)의 성적이 대학, 일자리 및 임금에까지 영향을 주는 경쟁적인 사회 구조를 경험한 학부모는 자녀를 뒤처지게 두면 안 된다는 불안감을 갖게 되고, 이 불안감에 의해 되도록 빨리 사교육을 시키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남들 만큼은 사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됨.
- 자녀 교육에 관심은 있으나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모르는 막연한 상황에서 SNS, 맘 카페 등에서 쏟아지는 정보와 고도화되고 전략화된 사교육 광고를 접하며 사교육을 시작하게 됨.
- 공교육 내 맞춤형 교육의 한계 및 만족도 저하도 초등학교 시기의 입시경쟁 사교육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임.
 -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교실은 20~30명 내외의 다양한 수준과 배경을 가진 학생들로 구성됨. 학업성취도가 높은 상위권 학생은 심화학습을 필요로 하고, 하위권 학생은 기초·보충 학습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 명의 교사가 모든 학생의 수준과 성향을 고려해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학교 교육에서 다양한 영역과 주제를 다루며 교육 활동을 제공하더라도 개별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파악하여 성장시킬 수 있는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예·체능 교육이나 코딩 등의 인공지능 소양 교육과 같이 지도에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 여기에 해당함.
 - 상급학교 진학과 입시, 재능의 조기 발견과 지원이 자녀의 자립과 성공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재의 사회 구조에서 학부모들은 공교육만으로는 그 과정을 준비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함.

다. 중등교육 시기의 사교육 유형과 발생 원인

- 중등교육 시기의 사교육은 대체로 입시경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중등교육 시기에 이루어지는 사교육을 살펴보면, 사교육을 받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것이 내용적 측면과 방법적 측면에서 교육적이지 못한 것이 문제임.
 - 내용적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사교육은 학생의 고유한 인지·정서적 발달 및 성장 단계와 속도를 왜곡하고 과도하게 조기부터 속진으로 운영되는 선행 사교육임.
 - 방법적 측면에서는 개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결여된 채 시험점수를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실수하거나 틀리지 않게 반복적으로 주입·숙달·암기 훈련을 시키고 단순히 문제 풀이에만 집중하는 사교육임.
- 중등교육 시기의 사교육 발생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 사교육을 발생시키는 국가·사회적 요인

- (고용 불안과 사회 불평등 심화) 사교육이 증가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교육이나 대입제도의 문제에 있다기보다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계층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노동시장의 문제와 관련됨.
 - 노동시장에서 대기업 등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가운데 대학 진학률이 높은 수준에 도달함에 따라, 청년(25~29세) 실업률이 2013년부터 상승세를 보임. 숙련 편향적 기술 진보(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경제위기, 코로나 팬데믹 등의 여파로 경제적 격차가 확대되고 취약계층이 증가하면서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미래 사회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지난 10여 년간 점차 비관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자녀 세대의 사회계층 이동 가능성이 높다”라는 문항에 대한 긍정 응답률은 2009년 48.4%에서 2023년 29.1%로 계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고용 불안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명문대학 및 의·약학 계열 대학 선호도로 이어지고 있음. 의대 쏠림 현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고려 요인 중 하나는 직종 간 임금 격차임(참고 자료: 2009년부터 2024년까지 15년 기간을 보면 GDP의 연평균 증가율은 4.4%인데 비해 건강보험료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건강보험 급여는 연평균 7.8%가 증가하였음). N수생 비율 증가 문제 등의 원인도 이와 관련됨.
 - 최근 교육통계자료를 살펴보면,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앞으로도 학생 수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치열한 경쟁을 가져오는 사회구조적인 격차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대입제도를 개선한다 해도 입시경쟁과 사교육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음.

- 가족 구조 및 사회 경제적 변화가 사교육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뚜렷함.
 -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부모들이 학원에 자녀의 교육을 맡기는 경우가 많아짐. 아울러 지역별 특성에 따라 사교육 활용 방식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교육열과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는 주로 전업주부들이 자녀의 학습 강점과 약점을 면밀히 파악한 후 단과 학원 위주의 맞춤형 사교육을 선호하나, 맞벌이 가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여러 과목을 한곳에서 해결하고 학원에서 숙제까지 마쳐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종합 학원 형태의 사교육이 인기를 얻고 있음.
 - 가구당 자녀 수가 줄고 경제력이 향상되면서 자녀 1인당 교육 투자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이는 고가의 사교육 상품 판매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최근 사교육 시장에서는 학생 수를 줄이는 대신 학원비를 인상하는 ‘고급화’ 전략이 두드러지고 있음.

2) 사교육 원인으로서의 대학 입학 경쟁과 대입 정책

- 대학 서열화와 대입 경쟁 심화 분위기 속에서, 시험 성적을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
 - 상위권 대학 진학이 사회적 지위 획득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팽배하며, 이는 치열한 대학 입시경쟁을 유발함. 출생을 감소와 평균 대입 경쟁률 하락이라는 구조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좋은 대학’ 진학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기대하여 ‘좋은 대학’에 대한 열망이 지속되고 있음.
 -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한 성적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특히 고등학교 내신 평가는 성취평가제(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함. 수행평가 부담도 큰 상황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고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심화 탐구 활동, 그리고 수능 준비까지 모두 병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최근에는 수능 난이도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임.
 - 공교육만으로는 대입 준비가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사교육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 공교육은 시험 성적을 올리는 데 직접 도움이 되지 않아 대학입시를 잘 대비해 주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감이 높음. 따라서 대입 성공을 위해서는 높은 성적과 질 높은 학교생활기록부를 보장해 준다고 광고하는 학원 등 사교육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경향을 보임.
- 현 입시제도는 상대평가를 통한 서열 경쟁에 기반하지만, 중학교 성취평가로는 학생의 정확한 순위를 파악하기 어려움. 이로 인해 순위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자녀가 혹시 뒤처질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사교육 수요를 유발함.

- 2011년 교육부의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에 따라 중학교 성적 산출 방식이 상대평가에서 성취평가(절대평가)로 전환되었으며, 그 결과 중학교 성적표에서 석차 표시가 없어짐. 또한, 성취평가제는 과목 간 등급 배분이 천차만별이고 학기별 등급 분포도 수시로 변하여 학생의 실제 실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결과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는 고등학교 1학년 3월에 실시되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통해 처음으로 학생의 상대적 위치를 인지하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상황에서 학원 레벨 테스트는 학부모들이 자녀의 실력을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며, 이를 바탕으로 학원은 학생의 부족한 부분을 조기에 파악하여 보충학습을 제공하는 마케팅을 하고 있음. 학원에서는 학생의 상대적인 위치와 함께 세부 교과 영역별 강점과 약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부모들을 사교육에 의존하게 만들고 있음.
- 대학입시의 변화 방향은 사교육의 영향력을 증가시키고 있음. 대학입시는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보다 공정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음. ‘문제가 되는 사교육’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은 공정성을 강조하는 수능과 내신임.
 - 수능은 국가가 주관하는 공신력 있는 시험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선택형 문항의 특성에 의해 사교육 기관이 제공해 주는 정답 찾기 요령 학습이 시험 성적 향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 수업이나 활동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 확산적 사고를 키우기보다 주어진 조건 안에서 정답 찾기에 집중하게 하는 수능 평가 문항이 교육적으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꾸준히 문제 제기가 이루어져 왔음.
 - 내신은 단위 학교별로 평가가 이루어져 교실 수업 참여의 중요도를 높여주지만, 상대평가 방식의 내신 성적 산출 제도에 의해 변별력 확보에 집중하게 되어 수업과 괴리된 평가 문항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음. 이에 시험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는 수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남.
- 복잡하고 자주 변경되는 입시제도는 학부모의 불안감을 키워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함.
 - 입시제도의 잦은 변경과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전형은 학교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진학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음. 자주 변화되는 입시 환경을 분석하면서 새로운 진학지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임. 특히, 일반고는 전국 모든 대학의 다양한 전형을 분석해야 하므로, 급변하는 입시 환경에 대한 빠른 대처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전형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수록 학부모의 불안감은 더욱 커짐. 특히 정성평가가 중요한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이나 논술전형은 고가의 유료 컨설팅 시장을 형성해 왔음. 이러한 전형에서는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입시 준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입시에 유리한 학교 생활기록부를 만들기 위해 사교육 시장의 컨설팅 전문업체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
- 입시전형이 다양해지면 ‘하나만 잘해도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 학부모와 학생들은 하나만 준비하는 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에 모든 전형을 다 준비해야 하므로 오히려 부담이 가중되는 현상이 나타남. 이는 결국 사교육 시장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음.

3) 사교육을 발생시키는 공교육의 한계

- 공교육 내 맞춤형 교육의 한계로 인해 사교육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음.
 - 공교육 시스템은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개별 학생의 소질과 적성,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또한 공교육의 본질과 역할은 지·덕·체의 전인적 성장에 있으므로,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기대하는 시험 성적 향상을 통한 대입 성공과 사회적 지위 획득에 대한 요구와는 괴리가 있음.
 -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교과 보충·선행학습 등 최적의 학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학원 등 사교육에 의존하려 함.
- 새로운 교육 정책 내용에 대한 홍보 부족과 정책의 지속성 및 안정성 부족으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
 - 새로운 교육 정책에 대한 공교육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학입시 정책이나 입학전략을 설명하는 행사를 특정 학원 등 사교육 기관이 주관함에 따라 사교육 기관을 신뢰하고 공교육 기관을 경시하는 풍토가 조성되고 있음.
 - 대입제도와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 결여에 의해 발생하는 불신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학생과 학부모는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함. 결과적으로 자녀의 진학 설계를 학교나 교원의 전문성보다는 사교육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아지고 있음.
- 교사의 평가 전문성과 권위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하여 학교 및 교사의 평가 자율권은 위축되는 반면 사교육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음.
 - 평가 결과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채점의 객관성을 강조하는 선택형 중심의 평가 관행이 만연하게 되었으며, 이는 다시 개념 학습 중심의 정상적인 학교 수업 참여를 소홀히 하고 정답 찾기 요령을 일러주는 문제 풀이 중심 사교육을 더 신뢰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

-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관성을 높이고 사교육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 수업과 연계된 서·논술형 평가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교사의 전문성 함양 기회가 부족하고 채점 결과에 대한 민원 우려가 높아 적극적으로 실천되지 못하고 있음.
- 채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와 학생부 기록 내용을 대폭 축소하고 교사 추천서를 폐지하는 등의 정책 변화에 따라 학교의 자율적인 평가 권한이 제한되고 있으며 교권은 축소되고 교사의 평가 전문성은 저하되고 있음.

4 사교육의 영향과 결과

가. 유아교육 시기 사교육의 영향과 결과

- 사교육은 개인적 차원의 영향을 넘어 공교육 시스템과 국가 사회적 차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사교육의 영향을 개인·가정에 미치는 영향,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해 살펴보고자 함.

1) 개인·가정에 미치는 영향

- 과도한 학습 관련 사교육은 유아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최근 연구들(Ren et al., 2020; Shi et al., 2023)은 체육, 예술과 관련된 일부 사교육 활동이 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과 스트레스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 반면, 학습 관련 사교육의 경우, 유아기에 과도한 학습 관련 사교육을 경험한 유아는 이미 학습에 대한 피로감과 정서적 부담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Ren et al., 2020; Shi et al., 2023). 이러한 상황에서, 학습 관련 사교육을 경험한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서 다시 유사한 학습 활동에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흥미를 잃고 학습을 회피하거나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음. 이는 외부 주도적 학습이 유아의 자율성과 내재적 동기를 약화시킨다는 결과와도 관련됨(Deci & Ryan, 1985; Vygotsky, 1978).
-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소득 계층 간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유아기부터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2024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통계청·교육부, 2025.03.13.)에 따르면 기관에 다니는 유아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2.8만 원인 반면, 가정에서 양육되는 유아의 사교육비는 85.6만 원으로 약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3시간 이상 수업하는 유아 대상 반일제 이상 학원에 참여하는 가정 양육 유아의 경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45.4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유아 대상 반일제 이상 학원 중에서도 영어학원의 비용이 가장 높아, 월평균 154.5만 원을 기록하였으며, 그 뒤로 놀이 학원 116.7만 원, 예능학원 78.3만 원, 체육학원 76.7만 원 순으로 조사됨.

- 이러한 조사 결과는 정규 유아교육기관에 다니지 않는 가정 양육 유아가 실제로는 사교육 기관을 선택하여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음을 보여줌.

2)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대신 유아 대상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에 다니는 유아의 수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공교육 기관의 유아 모집을 어렵게 해 운영의 위기를 초래함.
 - 2019년 말 615곳이었던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2023년 말 843곳으로 37% 증가함. 특히 서울 강남구(37곳), 양천구(24곳), 송파구(22곳), 용산구(20곳) 등 고소득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서울신문, 2024.08.11.).
 - 한편, 2022년 하반기 1,517개였던 서울 시내 유치원 수는 2024년 하반기 1,481개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강서·양천으로 156곳에서 150곳으로 6곳 감소함(아시아경제, 2025.2.27.).
- 일부 부모는 유아교육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교육이 제공하는 결과 중심의 학습성과를 정규 유아교육기관에 요구하여 공교육의 비정상적 운영을 초래함.
 - 유아교육기관은 원아 확보를 위해 정규 교육과정보다 학부모의 요구에 부합하는 사교육화된 특성화 프로그램에 더 많은 자원과 예산을 투입하게 되고, 이는 유아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3)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 유아기 사교육이 일반화되면서 부모들은 정규 유아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활동이 자녀의 학습 능력 신장이나 초등학교 준비에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고, 사교육을 통해 이를 보완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많은 부모가 유아기 공교육만으로는 향후 치열한 학업 경쟁에서 자녀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음. 이러한 인식은 유아기부터 사교육에 의존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되며, 공교육에 대한 신뢰 약화로 이어지고 있음.
 -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경우, 공교육은 점차 사교육의 보완재로 인식될 수 있으며, 유아교육기관은 학부모 만족을 위한 ‘서비스 기관’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음. 이로 인해 공적 교육시스템이 위축되고, 교육의 공공성 또한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유아기 사교육에 대한 사회적 압박과 기대는 단순한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구조적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최근 유아 대상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 예체능 특기 사교육, 조기 학습 프로그램 등 고비용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면서, 부모들이 유아기부터 지출해야 하는 교육비의 부담이 매우 커지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첫 자녀 양육 과정에서 경험하는 경제적 압박은 부모로 하여금 둘째나 셋째 자녀에 대한 계획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국가 차원의 심각한 인구구조 불균형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나. 초등교육 시기 사교육의 영향과 결과

- 모든 사교육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음.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사교육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거나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비교육적 사교육임. 따라서 사교육의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함께 살펴봄과 균형적인 시각으로 사교육을 받아들이어야 함. 다만 부정적인 영향은 그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나 효과를 고려했을 때 개인, 학교, 사회 차원에서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먼저 사교육의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개별 맞춤형 교육과 취미·교양·재능 계발을 들 수 있음.
 - (개별 맞춤형 학습을 통한 학업성취도 향상) 학원의 수준별 반 편성이나 1:1 과외를 통해 학생의 능력에 맞춘 교육이 가능하고 학교에서 학습이 부족한 과목에 대해 학생 개인별로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충하여 더 높은 학업성취를 달성할 수 있음.
 -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취미·교양·재능 계발) 학교 정규 교육과정의 보편적 시수 기준으로는 예·체능이나 코딩, 외국어 같은 영역에서 충분한 교육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움. 이 경우 사교육을 통해 다양한 영역을 경험하고 배우며 재능을 발견/발전시켜 나가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음.
- 이와 같은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은 개인과 학교 및 사회에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1) 개인에 미치는 영향

- 초등학교 시기의 사교육은 학생의 정서적 스트레스를 높이고 사회성 발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

- 사교육에서 비롯되는 초등학생 시기 과도한 학습량과 경쟁은 스트레스, 불안, 우울감 등을 유발하고 놀이와 휴식의 시간이 부족해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우울 증 등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질환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 중 특히 7~12세 연령대에서 가장 가파른 증가세가 나타났는데 과도한 조기 사교육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음. 7~12세 남자 아동 환자는 2020년 3만 3,800명에서 2024년 7만 6,159명으로 2.3배 늘었고 여자 아동 환자 역시 1만 2,260명에서 2만 9,165명으로 2.4배 증가함(메디컬월드뉴스, 2025.05.05.).
- 사교육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초등학교 단계에서 발달시켜 주어야 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함양과 주도성 발달을 저해할 수 있음.
- 탐구를 통한 자기주도적 발견학습과 이를 통한 자아 존중 학습의 기회가 줄어들어 스스로 찾아서 학습하는 습관을 기를 기회를 상실하게 됨.

2)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

- 초등학교 시기 사교육은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하며 학교 교육을 위축시키고 있음.
- 학교 교육의 목적을 개인의 성장과 발달보다는 진로·진학을 위한 과정으로 인식하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에 더 의존하게 되면서 공교육의 역할은 모호해지고 신뢰도는 낮아짐.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 교육이 위축되고 진도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왜곡되기도 하면서 교사 수업의 질이 저하되고 교사의 권위가 상실됨.
- 학교 수업은 시험 성적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교육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특히 사교육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선행학습에 의해 학교 수업에 대한 학생의 참여도와 집중도가 낮아짐으로써 정상적인 수업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3) 사회에 미치는 영향

- 초등 시기의 사교육은 교육 기회의 불평등 및 교육 격차 확대를 초래함.
-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의 규모가 달라지고, 이러한 교육 기회의 불균형 심화로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의 교육 격차가 확대됨. 특히 고소득 가정보다 저소득 가정의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의 증가 폭이 더 큰데 이는 저소득 가정에서도 사교육을 ‘필수’로 인식할 정도로 사교육의 영향력이 커졌음을 시사함.

< 표 II -7 > 가구 소득수준별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단위: 만원, %, %p)

구 분	사교육비			참여율		
	2023년	2024년	증감률	2023년	2024년	증감
전 체	43.4	47.4	9.3	78.5	80.0	1.5
300만원 미만	18.3	20.5	12.3	57.2	58.1	0.9
300 ~ 400만원	27.9	28.5	2.1	70.3	68.2	-2.0
400 ~ 500만원	35.3	36.6	3.6	76.8	77.3	0.4
500 ~ 600만원	41.2	44.0	6.9	80.6	82.0	1.5
600 ~ 700만원	48.4	49.1	1.4	85.1	83.9	-1.2
700 ~ 800만원	52.7	55.6	5.5	85.8	86.2	0.4
800만원 이상	67.1	67.6	0.8	87.9	87.6	-0.3

출처: 통계청·교육부(2025.03.13.).

- 사교육은 한번 시작하면 다른 대안을 찾기 힘들어 중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악순환되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옴.
- 사교육비는 가계의 주요 지출 항목 중 하나로 가정에 큰 경제적 부담을 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참여율이나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저소득 가정에서도 지출이 늘어나고 있음(<표 II -7> 참조).
- 높은 사교육비는 경제적 부담과 함께 자녀 양육 부담을 주게 되고 저출생과 같은 사회·국가적인 문제로 이어짐. 사교육비가 저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유진성(2023)의 연구에 따르면, 사교육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실질 사교육비가 1만 원 증가할 경우 합계출산율이 0.012명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2015~2022년 자료 활용). 김태훈(2025)의 연구에서는 학생 1명당 사교육비가 1% 증가하면 이듬해 합계출산율이 약 0.192~0.262%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첫째보다 둘째 및 셋째 이상 자녀의 출산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2009~2023년 자료 활용). 이는 사교육비와 출산율 간의 통계적 관련성을 시사하는 결과라 하겠음.

다. 중등교육 시기 사교육의 영향과 결과

1)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

- 학교 교실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사교육이 시험점수를 높이는 데 유리하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학교 수업을 소홀히 하는 등 공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사교육 참여 학생의 수업 참여 및 집중도가 낮아짐에 따라 정상적인 수업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음. 개념의 이해를 강조하는 수업이 시험 성적을 높이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교 교육의 본질이 침해되고 있음.
- 학교는 학생 개개인의 능력에 부합하는 맞춤형 수업을 제공해 주어야 하고, 지식 전달을 넘어서서 창의적 사고와 탐구력을 길러주어야 하며, 학생 상호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자기주도적 학습 활동을 제공해 주어야 함. 그러나 수능시험을 잘 볼 수 있게 해주어야 좋은 수업으로 인정받게 되다 보니 문제 풀이 요령에 집중하는 학원식 수업 방식이 고등학교 교육에서도 일반화되고 있음.
- 또한, 학생들이 학원의 내신시험 준비를 통해 문제 풀이 요령을 익힘에 따라 학교는 변별력 확보를 위해 시험 문항의 난이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임. 이로 인해 수업 내용과 평가 간 연계성이 약화되고, 수업은 시험 대비와 무관한 활동으로 인식되는 경향을 보임. 결과적으로 수업 활동의 교육적 의미는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시험 성적만이 중요하게 인식되는 분위기가 조성됨. 이러한 환경 속에서 경쟁 중심의 학습 문화가 강화되고 있음.
- 경쟁 중심 문화는 ‘시험’ 공부에 소질이 없는 학생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성적을 위해서라면 소송도 불사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음. 또한 교육적 효과와 관계없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으면 참가하지 않는 학교 활동들로 인해 교권이 침해되고 교사의 자긍심이 저하되고 있음.

2)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사교육을 규제하여야 하는 정당성은 사교육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있는가, 또 얼마나 큰가에서 찾아야 함. 사회적 관점에서 사교육이 인적자본 개발에 기여하지 못하고, 교육 격차를 확대시켜 사회갈등을 증폭한다면 정부개입이 바람직할 수 있음.
- 사교육이 인적자본 개발에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다는 주장은 “사교육이 시험점수를 높이는 데에는 도움을 주지만 창의력과 사고력 등 실제 역량을 함양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반영하고 있음. 만일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교육은 시험 성적 향상을 위한 정당한 방식(즉, 역량 함양을 통한 시험 성적의 향상)에서 벗어난 편법적인 요령 습득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올바른 교육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임.
- 역량 함양이 수반되지 않는 시험 성적 상승만을 위한 편법적 요령 학습이 확산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남. 유사한 요령 학습을 모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정상적인 역량 함양 학습을 무력화하며, 심지어 정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수업에 대해서

도 시험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신뢰하지 않게 됨. 더 나아가 편법과 요령의 효과를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새로운 유형의 평가 문항을 개발하게 하거나,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사항을 축소하는 등 평가 관리의 비용 상승을 가져오고 있음.

-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근원적인 방안은 사교육이 시험 성적 향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수업과 평가 방법을 개선하거나, 또는 더욱 근원적으로 사교육이 대학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대입 전형 정책을 개선하는 일임. 그러나 이와 같은 근원적 대응 방안은 많은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움.

- 사교육은 제한된 열매를 둘러싼 ‘경쟁’에 뿌리가 있으며, 소득격차나 지역 불균형 문제 등은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동함. 그러나 사교육은 다시 학업성취도 격차와 이를 통한 소득격차 및 지역 불균형 문제를 심화시킴으로써 악순환의 연결 고리를 만들어가고 있음.

- 임금 격차 심화 → 경쟁 심화 → 사교육 심화 → 학업성취도 격차 심화 → 임금 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는 사교육 경감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적 개입을 설계하는 데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음.

- 한편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확충, 임금격차 완화, 지역 균형 발전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개선하는 근원적 노력이 필요함. 일본의 경우는 사교육 수요가 한국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남. 그 이유는 일본의 수도권 집중 정도가 한국보다 약하고, 지역별로 산업-교육 연계 체제가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취업이 용이하고 임금 격차가 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일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청년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적으며, 일본에 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가 크기 때문임(박상준, 2016).

- 이와 같은 근원적 접근과 함께 사교육의 영향력을 줄임으로써 격차의 심화 및 대물림 현상을 억제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함. 사교육에 의한 격차가 커질수록 사교육비 경쟁이 심해지며, 비용도 증가하게 됨. 이는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을 가져다주고 있으며, 저출생 문제도 경쟁 심화와 자녀 교육을 위한 사교육비 상승과 무관하지 않음.

Ⅲ. 사교육 경감 정책 분석

1 역대 정부의 사교육 경감 정책 분석

- 2009년 이후 2024년까지 역대 정부에서 추진한 사교육 경감 정책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표 Ⅲ-1>과 같음. <표 Ⅲ-1>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역대 정부 사교육 경감 정책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그동안의 정책은 대체로 사교육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바, 이는 곧 사교육의 문제가 공교육의 부실이나 공교육에 대한 불만으로부터 야기된 것으로 설명하는 관점을 따르는 것임. 그러나 사교육의 일차적인 원인이 사회·경제적 자원과 지위에 대한 경쟁의 심화라는 점을 중시하면, 공교육 정상화, 또는 공교육의 내실화 여부와 무관하게 사교육은 유지될 수밖에 없으며, 그 해결 방안은 좀 더 근원적인 수준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공교육 내실화 방안으로는, 학교 다양화, 수업 내실화, 방과후학교 내실화 및 초등 돌봄 지원 확대, 교사 전문성 제고(교원 능력 개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과정 중심 평가로의 전환 등이 제시되었음. 사교육 수요의 긍정적 측면을 찾아내어 이를 학교나 EBS 등의 공공 기관을 통해 흡수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다만, 사교육 수요 중에는 교육적으로 부적절한 수요도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입시제도의 개선 방안이 함께 제시되었는데, 입학사정관제 도입, 논술전형·특기자 전형 등 특정 전형의 축소를 통한 대입전형 단순화, 대입전형의 사전 예고 기간 확대, 대학별 고사, 수능 및 내신의 교육과정 내 평가, 대입 전형에 대한 공공 컨설팅 및 대입 정보 제공 강화 방안 등이 추진되었음.
 - 범사회적 사교육 경감 노력 병행으로서, 대학 특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한 대학 서열구조 완화,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의 선취업 후 진학 기회 확대, 중등 직업교육 강화, 양질의 고졸 일자리 확대, 학력 대체 능력 인정 체계(NCS, NQF) 개발, 학력보다 직무능력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등이 추진되었음.
 - 사교육 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방안이 함께 추진되기도 함.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학원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불법·편법 운영 학원 특별점검, 불법학원 신고포상금제도’, ‘학원비 인상 억제 및 선행교육 풍토근절’, ‘유아 대상 영어학원 학원비 인하 유도, 학원 선행학습 유발 광고 제한, 사교육 특별 관리구역 지정, 선행교육 및 선행출제 점검 강화’, ‘학원비 안정화 지속 추진을 위한 교습비 초과(편법) 징수 행위 규제, 입시컨설팅 업체

특별점검, 사교육비 점검 관련 시도교육청과 연계·협력’,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 설치 및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사안 엄정 대응, 교원의 사교육 기관 출제 및 부조리 엄정 대응’ 등이 추진되었음.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조기 선행 사교육이 사교육 기관의 공포 마케팅에 의해 촉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규제 방안’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함.

- 이와 같은 다양한 사교육 경감 정책들이 충분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에 사교육 경감을 위한 여러 정책의 유형을 구분하고 그 특징과 성과 및 한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표 Ⅲ-1 > 역대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 주요 내용(2009~2024)

정부 (시기)	정책명	추진배경	정책목표 및 방향	정책수단
이명박 정부 (2009. 06.03.)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 경감 대책	• 중산층 붕괴를 방지하여 한국경제 회복,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인 인재대국 실현 • 공교육 강화, 입시제도 선진화 및 사교육 시장의 합리적 운영 • 사교육 흡수 : 방과후학교 및 EBS 수능강의, 사교육없는 학교 등 사교육의 공교육으로 흡수	• 목표: 학교교육강화로 사교육보다 나은 공교육 실현 • 방향: 공교육 경쟁력 확보,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내실화 방향으로 전환, 사교육비 경감 방향	• 입시제도 선진화(제도) → 입학사정관제도, 과고/외고 입시제도 개선 • 학원운영 투명성 확보(규제) → 불법·편법 운영 학원 특별점검, 불법학원 신고포상금제도 • 공교육 내실화(조성) → 학교다양화(고교 다양화 300, 농어촌 전원학교), 정규수업 내실화(학교자율화, 교과교실제, 학업성취도 평가) • 책무성강화(조정) →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도입, 시도교육청평가, 사교육영향평가
박근혜 정부 (2014. 12.03.)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	• 지속적인 1인당 사교육비 증가로 인한 가계부담 완화 필요성 • 자기주도학습 능력 신장과 창의적 인재 양성에 걸림돌 • 저출산 및 사회적 불평등 사회적 문제 야기	• 목표: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 희망사다리 재구축 • 방향: 학벌주의 및 대학 서열화 해소 및 공교육 신뢰도 회복	• 공교육정상화법 제정(제도) →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2014)」 제정 • 학원비 인상억제 및 선행교육 풍토근절(규제) • 유아대상 영어학원 학원비 인하 유도, 학원 선행학습 유발 광고 제한, 사교육특별관리구역 지정, 선행교육 및 선행출제 점검 강화 • 공교육 내실화(조성) → 영어 : 영어교원전문성신장, 영어 방과후학교 내실화, EBS 자기주도학습 지원, EBS 수능교재 교육과정 조정 → 수학 : 교육과정 및 교과서 학습내용 조정, 학습결손 및 자기주도학습지원, 현장교사 역량개발 연구회 지원 → (초등) 초등 방과후 돌봄기능 강화 및 지역 간 돌봄 기관 연계 운영 지원, (중학) 영어·수학 및 사교육 유발 입학전형 요소 배제, (고교) 대입전형의 사전예고 기간 확대 및 학내 맞춤형 진학지도 • 범사회적 사교육경감 노력 병행(조정) → 대학 특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한 대학서열구조 완화 → 선취업 후진학 기회 확대(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 학력 대체 능력인정체계(NCS, NQF 개발) → 학력보다 직무능력 중시 사회분위기 조성)

정부 (시기)	정책명	추진배경	정책목표 및 방향	정책수단
문재인 정부 (2019. 03.02.)	대입개편 방안 안정적 추진 및 사교육비 경감	※ 이전 정부와 달리 ‘사교육경감 대책’ 단독 발표는 없었고,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 결과 이후 대응책 발표(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사교육비 감소)		• 공교육 내실화(조성) → 논술전형·특기자 전형 축소(대입전형 단순화) →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 (초등) 방과후학교 내실화, 과정 중심 평가로, 온종일 돌봄체계 • 학원비 안정화 지속 추진(규제) → 교습비 초과(편법) 징수 행위 규제, 입시컨설팅 업체 특별점검 → 사교육비 점검 관련 시도교육청과 연계·협력 • 사회구조적 영향 완화 노력(조정) → 중등직업교육 강화, 양질의 고졸 일자리 확대, 교육비지원
윤석열 정부 (2023. 06.01.)	사교육 경감 대책	• 학생 사교육비 급증, 과도한 사교육 완화 필요 • 학생·학부모·교사 모두에게 고통, 학원만 배 불리는 사교육 완화 필요 • 3대 교육개혁(국가책임 교육·돌봄으로 유초등사교육 흡수, 디지털 교육혁신으로 사교육 억제, 대학개혁으로 서열화 완화) 추진과 병행 추진	• 목표: 사교육 적극 대응으로 공교육 신뢰회복 • 방향: 학부모와 소통 및 관계기관 협력, 3대 교육개혁 과제와 연계 추진	• 공정한 입시제도 구축(제도) → 대학별고사 및 내신 교육과정 내 평가, 공공컨설팅 및 대입정보 제공 강화 → (수능) 공교육 과정 이외 내용은 출제 배제 원칙, 학교교육에 부합되는 수능 출제로 개편 •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근절(규제) → 신고센터 설치 및 집중신고기간,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사안 엄정 대응 → 교원의 사교육 기관 출제 및 부조리 엄정 대응 • 공교육 내실화(조성) → (초등) 늘봄학교 확대 및 재정지원확대, 방과후 과정 확대(대학 및 민간 참여 확대) → (중고) EBS 수준별 강좌 확대, 공교육 내 교과 보충지도, 학습지원 서비스 강화 → (유아) 이음학기(유·초연계) 운영 및 방과후, 돌봄과정 확대, 유보통합연계, 3~5세 교육과정 개편, 유아사교육비 신설(25년~)

출처: 한성민·조덕상·이종연(2025), pp.183-184.

2 사교육 경감 정책의 유형과 특징

가. 사교육 경감 정책의 유형 분류

- 많은 사교육 경감 정책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과열이 지속되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추진되었던 사교육 경감 정책에 대한 분석과 성찰이 필요하다. 이에 이 절에서는 사교육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연계하여 사교육 경감 정책 유형을 구분하고 그 주요 특징과 성과를 분석해 보고자 함. 사교육 경감을 위한 여러 정책과 방안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사교육 경감 대책의 분류 틀은 관점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구안할 수 있음.

- 원론적인 수준에서 보면, 사교육 경감을 위해서는 사교육의 원인을 확인한 후 각 원인 요인을 제거하거나 통제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곧 사교육 경감 정책의 출발점이 될 것임. 즉, 사교육의 각 원인 요인에 따라 경감 정책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을 것임.
- 이종재·장효민(2008)은 사교육에 대한 관점(억제 또는 수용)과 사교육 대책의 접근 방법(원인 또는 대중)을 기준으로 입시경쟁 제거형, 사교육 규제형, 공교육 내실화형, 사교육 제공형 등으로 구분하였음.
- 그 밖에도 공교육과 사교육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예: 올바른 전인 교육과 그릇된 입시 위주 교육 사이의 대립? 무엇이 더 바람직한 교육의 모습인지를 두고 경쟁하는 관계? 부분적 중복 관계?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상호 보완의 관계? 서로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상호독립의 관계? 등)에 따라 사교육 경감 정책의 분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

- 이 절에서는, 사교육이 근원적으로 ‘경쟁’으로부터 발생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사교육 경감을 위한 접근의 유형을 크게 ‘경쟁 부담 관리 중심 접근’과 ‘경쟁 내용 관리 중심 접근’으로 구분하고자 함. 전자는 경쟁 관련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접근이며, 후자는 경쟁의 내용, 즉 무엇에 대해 어떻게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타당한지, 더 공정한지, 그리고 사교육 유발 효과가 줄어드는지 등에 관심을 기울이는 접근임.
- 경쟁 부담 관리 중심 접근은 다시 (1) ‘경쟁’의 폐지 또는 감소 정책, (2) ‘경쟁의 부담’ 경감 정책, (3) ‘경쟁 부담에 대한 공적 지원 확대’ 정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첫째 유형은 경쟁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데 관심을 두며, 둘째 유형은 경쟁은 유지하되 경쟁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데 관심을 기울임. 셋째 유형은 경쟁 부담의 존재는 인정하되 그러한 부담에 대한 공적 지원을 확대하여 개인의 사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정책임.
- 경쟁 내용 관리 중심 접근은 부담 자체를 줄이는 것보다는 무엇을 두고 경쟁하게 하는 것이 공정성이나 교육적 효과 측면에서 더 적절한지에 더 큰 관심을 기울임. 이 접근에서도 경쟁의 내용 또는 대상에 따라 사교육을 유발하는 효과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즉 사교육의 부담 경감 여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경쟁의 관리 방식에 따른 사교육 경감 정책의 유형을 개략적으로 요약하면 <표 Ⅲ-2>와 같음.

< 표 III-2 > 경쟁 관리 방식에 따른 사교육 경감 정책의 유형 구분

구분	세부 유형	주요 질문	사례
경쟁 부담 관리 중심 접근	‘경쟁’ 폐지 또는 감소 정책	• 경쟁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 경쟁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 • 대학 서열화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서울대 폐지, 서울대 10개 만들기 • 대입 추천 전형 • 여러 줄 세우기에 의한 경쟁 분산 등
	‘경쟁 부담’ 경감 정책	• 경쟁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 부담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 문항 난이도 하향 조정 • 응시 과목 수 축소 • 전형 간소화 및 단순화 등
	‘경쟁 부담에 대한 공적 지원’ 확대 정책	• 경쟁에 따른 부담을 공적 자원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학교 교육에서 사교육 수요 흡수 • EBS 수능 강좌, 서울 런 프로그램 • 진학지도교사 협의회 활동 등
경쟁 내용 관리 중심 접근	대입 전형 요소의 상대적 비중 관리 정책	• 내신·수능·대학별고사 중 무엇을 활용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타당한가? 공정한가? 사교육 유발 효과가 적은가?	• 내신 반영 비율 확대 정책 • 수도권 대학 정시 비중 40% 정책 • 본고사 금지 정책 등
	대입 전형 자료별 특성 관리 정책	• 교과성적·비교과활동실적·통합수능· 통합논술 등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타당한가? 공정한가? 사교 육 유발 효과가 적은가? (어떠한 문항 을 사용해야 하는가? 성적 산출·표기 방법은?)	•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 논의 • 수능 응시과목 조정 정책 • 학생부 기록 내용 제한 정책 • 내신 성취평가제 정책 등
기타	공교육 정상화 정책	• 사교육이 불필요하도록,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에서 모두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공교육이 사교육에 비해 더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학교 성적이 학교 밖의 성적(수능)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 학교 교육에서 사교육 수요 흡수 • 내신 반영 비율 확대 정책 • 학교 다양화 정책 (교육에 대한 다양한 수요의 흡수 정책) • 정규수업 내실화 정책 및 교원 능력 개발 평가제 정책 • 공교육 내실화 정책 등
	사교육 기관 관리 정책	• 사교육 기관의 부적절한 운영에 대해 합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 과대광고 금지, 영업시간 조정 등
	학부모 지원 정책	• 학부모가 올바른 교육적 판단에 따라 자녀교육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데 필요한 지원은?	• 학부모 간담회, 학부모 특강 등

나. 경쟁 관리 방식에 따른 사교육 경감 정책 유형별 특성 분석

1) 경쟁 약화를 위한 정책

- 사교육이 경쟁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경쟁 자체를 소멸시키거나, 또는 줄이고자 하는 정책으로서, 관점에 따라서는 가장 근원적인 수준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음.
 - 일차적으로 사교육이 명문대학 입학 경쟁으로부터 발생한다는 점을 주목하여, 명문대학 자체를 폐지하거나(서울대 폐지론, 연구 중심 대학 학부생 선발 금지 논의 등) 또는 경쟁 분산을 위해 명문대학을 더 다양하게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서울대 10개 만들기)이 제안되고 있음. 대학 서열화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제안과 여러 줄 세우기 경쟁으로의 전환 정책 (“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 간다!”), 그리고 그 근원이 되는 ‘학벌주의’ 해소를 위한 노력 등이 사례가 됨.
 - 현실적으로 경제·사회적 경쟁이 유지되는 한 그와 연계되는 대학 입시경쟁을 없애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블라인드 면접 등이 부분적으로는 효과를 거두어 ‘대학 서열 의식’을 약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대학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 자체를 없애는 것은 ‘추첨제’가 아니라면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더 나아가, 선의의 경쟁을 통한 경쟁력 제고는 국제 경쟁 사회에서 그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고 유지할 필요도 있음.
 - 수평적 다양화를 통한 경쟁의 분산 정책(우수 대학의 확대, 진로 다양화 및 선호 전공의 다양화 등)은 상대적으로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단기간에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경쟁 자체를 없애는 것은 어렵지만, 경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무엇보다 (1) 경쟁을 통해 교육적 성장이 가능한 생산적인 경쟁이 되도록 하는 방안(예: 양궁 국가대표 선발을 위한 경쟁), (2)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3) 한 번 실패하더라도 재도전의 기회가 주어지는 경쟁 체제의 모색이 필요함.
 - 공정성과 관련하여, 개개인의 배경 변인에 의해 성취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 논란과 우려가 많은데, 규제적인 대응보다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 ‘경쟁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 경쟁 자체의 소멸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에서 경쟁은 일종의 필요악으로 인정하되 ‘경쟁에 따르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으로서, 경쟁 부담의 원천을 무엇으로 보는가에 따라 세부 접근은 달라질 수 있음.

- 경쟁 부담의 이유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요인의 하나는 평가 문항의 난이도 수준임. 너무 어려운 문제, 여러 번 비틀어서 함정을 포함하고 있는 문항(‘킬러 문항’)이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높이고 있다는 판단에서, 쉬운 문제 출제를 강조함. 그러나, 쉬운 문제는 ‘변별력’에 대한 우려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부담 경감을 이유로 평가 문항의 난이도를 무조건 하향 조정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타당하지 않음. 또한 난이도를 낮춘다고 해도 경쟁의 부담이 줄어들기보다는 ‘틀리지 않기 위한 경쟁’, 즉 학업 성취 수준이나 역량 함양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무한 반복 연습’ 경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음. 국제 경쟁력 맥락에서 볼 때 난이도 하향 조정은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보기 어려움.
- 시험 과목 수의 축소나 시험 범위의 축소도 경쟁 부담 방안으로 제시됨. 그러나 이 방안 역시 교육과정의 왜곡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옴. 원칙적으로 보면 이수하는 과목과 평가 과목은 일치되어야 함. 여러 제약 요인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수 과목과 평가 대상 과목의 괴리가 너무 크지 않도록 평가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대입 전형 제도의 복잡성이 사교육 또는 사교육 기관을 통한 입학 상담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전형 간소화 정책이 추진되어 왔음. 한때, 여러 줄 세우기를 강조하면서 전형 유형이 대학별로 수십 가지에 이를 만큼 다양화되었지만, 이러한 다양화는 오히려 여러 전형을 준비하기 위한 부담의 증가(‘죽음의 트라이앵글’ 비판 등)를 가져오기도 하였고, 더 중요하게는 학생과 학부모의 전형 준비를 어렵게 만들었음. 이후 대입 전형을 간소화하는 정책이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대학별 전형의 차이 등에 의해 사교육 기관의 입시 컨설팅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임.

3) 경쟁 부담 중 ‘사적 부담 경감’ 및 공적 지원 확대 정책

- 경쟁의 존재를 인정하고, 경쟁을 위한 부담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사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공적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으로서, 공적 지원의 주체로는 학교와 함께 EBS 등의 공공 기관과 지역사회 등이 참여할 수 있음.
- 학교의 역할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관점의 하나는, 사교육 수요가 공교육의 부실로부터 발생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공교육을 내실화함으로써 사교육 수요와 사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임. 그동안 추진되었던 다양한 ‘공교육 내실화’ 정책은 이와 같은 가정과 주장에 근거를 두고 있음.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은 ‘사교육 수요’의 유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개인별 맞춤 지도를 사교육 수요의 한 사례로 해석하면 어느 정도 타당할 수 있지만, 시험 성적 향상을 위한 문제 풀이 연습을 사교육 수요의 핵심으로 해석한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임. 전통적으로 그릇된 교육의 모습으로 지적되어 온

‘입시 위주 교육’을 공교육 내실화로 볼 수는 없기 때문임(모든 사교육이 오직 문제 풀이 훈련으로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지, 그중에 교육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함).

- 학교 교육이 시험 성적 향상(특히 수능 등의 외부 시험 성적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교육 본연의 과제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방과후 활동 및 돌봄 프로그램의 활성화, 희망 학생에 대한 야간 자율학습 기회 제공, 질 높은 진학 지도와 상담 등은 공교육의 본령을 유지하면서도 사교육 수요를 학교가 흡수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음(단, 초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특기·적성 계발 방과후 활동 및 돌봄 프로그램의 활성화 등은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방과후 활동에 대한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하여 학교 교육에서 완전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음. 공적 기관인 지자체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방과후 활동 내용과 프로그램 질 관리와 운영의 안정성이 확보될 것임).
- 학교 외에도 EBS나 칸 아카데미 한국어 버전, ‘서울 런’ 프로그램 등 공적 서비스를 이용한 사교육 수요 흡수 정책은, 부분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예: EBS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이유에서 수능의 일정 비율을 EBS 강좌와 연계하는 정책은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바람직한 정책이 될 수 있음. 이들 공적 지원의 효과는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통합 플랫폼을 통해 여러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안내하여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칸아카데미의 칸미고는 전세계 40개 이상의 언어를 통해 1억 5000만 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음. 칸아카데미의 사명은 모든 이들에게 세계적 수준의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며, 개인 맞춤형 학습프로그램을 전 세계로 확장하는 것이 핵심과제라고 함(Khan, 2024).

4) 대입전형 요소의 상대적 비중 관리 정책

- 수능, 내신, 대학별 고사 등 대입전형 요소의 반영 비율을 조정하여 사교육 수요를 경감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특히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사교육 수요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내신의 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됨.
- 대입전형 요소의 상대적 비중 관리 정책은 부분적으로는 사교육 부담의 경감 효과를 기대하기도 하지만(이 점에서 앞의 세 가지 정책과 유사한 특성을 공유하지만), ‘풍선 효과’를 고려하면 특정 전형 요소를 위한 사교육 수요가 다른 영역으로 이동할 뿐 사교육 수요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반론도 제기될 수 있음.
- 전형 요소의 비중 조정은 입시의 공정성 및 교육적 타당성 측면에서 논의되기도 함. 내신

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중요하게 고려하며, 대학별 고사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중요하게 고려함. 수능은 채점의 객관성이 높다는 이유로 ‘공정성’ 측면에서 강점을 갖는 것으로 해석됨.

- 활용 가능한 전형 요소들의 교육적 타당성이나 공정성 등을 논의하는 것은 단순히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추는 논의에 비해 무엇을 위한 경쟁이 되어야 하는지 경쟁의 내용을 함께 고려한다는 점에서 ‘경쟁 내용 관리 중심 접근’이라고 명명할 수 있으며, 교육적 가치를 중요 고려 사항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5) 대입 전형 자료별 특성 관리 정책

- 수능, 내신, 대학별 고사 등 입학 전형에서 활용되는 대입 전형 자료들의 특성(문항의 형식, 출제 범위, 성적 부여 방식 등)을 관리함으로써 사교육 수요를 조정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추진되는 정책으로서, 예를 들어, 수능 영어 과목의 절대 평가제를 모든 과목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 수능 자격고사화 방안, 내신 기록 내용의 범위 제한, 대학별 고사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 원칙 등이 사례가 됨.
- 이들 정책 역시 사교육 부담 경감의 맥락에서 제안되고 논의되기도 하지만, 이와 함께 교육적 타당성이나 공정성 등의 가치가 함께 논의된다는 점에서 ‘경쟁 내용 관리 중심 접근’으로 볼 수 있으며, 사교육 대응 정책의 논의 범위를 확장하는 의미를 가짐.

6) 기타

- 이 절에서 살펴본 정책의 유형들은 ‘경쟁’ 관리의 측면에서 구분한 유형으로서, 이 관점만으로 그동안의 사교육 경감 정책을 모두 포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대표적인 사교육 경감 정책인 ‘공교육 정상화 정책’은 부분적으로는 앞에 제시한 분석 틀에 의해 다루어지고 있지만, 모든 ‘공교육 정상화’ 정책을 다룬 것은 아님. 이 외에도 사교육 관리 정책, 학부모 지원 정책 등은 경쟁 관리 측면에서의 분류 틀과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공교육 정상화 정책: 사교육 경감 정책으로서의 공교육 정상화 정책은 사교육 문제가 공교육의 부실로부터 발생한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사교육이 불필요하도록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에서 흡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또는 공교육이 사교육에 비해 더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음. 그러나 공교육의 질적 수준이 우수하고 이에 대한 만족도가 높더라도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한 사교육 수요는 억제하기 어려우며, 이 점에서 공교육 내실화 방안만으로 사교육 경감을 기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더 나아가 ‘비교육적인’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에서 흡수해야 한다는 주장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함. 물론 사교육 경감 효과와 무관하게, 공교육의 내실화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노력은 지속되어야 함.

- 사교육 관리 정책: 1980년대의 사교육 전면 금지 정책과 같은 형식의 정책으로서, 사교육 기관의 영업시간 조정, 과대광고 금지, 학원 수업료 관리 정책 등이 사례가 됨.
- 학부모 지원 정책: 학부모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사교육 기관의 과대광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녀 교육을 지원하도록 하는 정책으로서 단위학교에서 실시되는 학부모 간담회 등이 사례가 될 수 있음. 학습자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고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조기 선행 사교육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앞으로 이 분야에서의 대응 방안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봄.

3 사교육 경감 정책의 성과에 대한 성찰

- ‘역대 정부의 사교육 경감 정책 분석’과 ‘사교육 경감 정책의 유형과 특징’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사교육 경감 정책의 성과를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다양한 사교육 경감 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진단의 문제인가, 처방의 문제인가, 실천의 문제인가? 또는 사교육 현상을 바라보는 접근과 관점의 문제인가?
- 사교육 과열 현상 해소를 위해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의 기본 방향은 무엇인가? 사교육 경감 정책의 추진에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
- 오랜 기간 동안 한국 교육의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사교육 과열 문제를 단기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묘수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특히 전형 요소의 유형이나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의 조정 등 입시 정책의 부분적인 변화를 통해 사교육 과열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정책은 한계가 있음. 사교육 과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미래의 변화를 전망하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사교육 과열 문제가 다양한 요인들의 복잡한 상호 연관 작용의 결과로 나타났음을 인식하여,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겠다는 조급함을 버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근원적 과제들을 교육적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선해 가는 노력이 필요함.
- 가장 근원적인 수준에서는 사회·경제적 과열 경쟁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임금 격차

와 지위에 따른 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범사회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입학 시점에서 평생 지위가 결정되는 경직된 사회 이동 체제를 개선하고 다양한 기회가 주어지는 유연한 사회 경쟁 체제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

- 교육의 맥락에서는 교육과정 및 수업과 일관된 평가 패러다임을 정착하는 것이 가장 근원적이며 핵심적인 과제임. 학교 수업보다 사교육이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인식되는 현상의 이면에는 수업과 괴리된 평가 문항과 평가 방법, 즉 선택형 문항 중심의 평가 관행이 자리 잡고 있음. 수업에서 강조하는 개념 학습이나 창의적 사고 역량보다 사교육을 통해 익힌 정답 찾기 요령이 시험 성적 향상에 더 도움이 되는 한 사교육 과열 현상을 억제하기는 어려움.
- 이와 함께 대입 정책의 패러다임은 학교 교육과정의 충실한 이수를 존중해 주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전형 요소와 전형 자료를 학생들이 이수하는 교육과정과 일관성을 갖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평가 문항 역시 교육과정 및 수업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교육 경감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기본 원칙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음.
 - 사교육의 원인을 좀 더 심층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경감 정책 역시 단편적·분절적 접근을 넘어 사회 전반적인 요인을 고려한 종합적·유기적이며 구조적·시스템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대중적인 접근을 넘어 사회 전반적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근원적인 수준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사교육 문제를 교육 분야만의 문제로 해석하기보다는 사회 전반의 협력이 필요한 사회적 과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 점에서 ‘범사회적 사교육 경감 노력’으로 추진되었던 방안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사교육 경감 정책이 학교 교육 본연의 역할과 가치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시험 대상 과목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이나 문제 풀이 중심의 수업 운영에 대한 요구가 있다고 하여 이를 학교 교육에서 수용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다양한 사교육 유발 수요 중 학교 교육이 수용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또는 수용해서는 안 되는 것을 명료하게 구분하고 올바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사교육 경감을 위한 공교육 내실화 정책은 학교의 교육 환경과 여건을 개선하고 교사의 전문성 함양을 지원하며 교사의 자율성과 교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미흡한 환경과 여건의 개선 없이 학교와 교사에게 더 큰 노력만을 요구하거나, 비교육적인 사교육 수요를 학교에서 수용하도록 요구하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IV. 중장기 유·초·중등 사교육 경감 방안

1 미래 세대의 특성 및 미래 교육 변화와 사교육 전망

- 중장기 유·초·중등 사교육 경감 방안의 방향 탐색에 앞서서 이 절에서는 먼저 미래 세대의 특성과 미래 교육의 변화 방향을 전망해 보고, 이러한 변화에 따른 사교육의 양상을 예측해 보고자 함. 앞으로의 사교육 경감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미래 교육에 대한 전망이 출발점이 되어야 하기 때문임. 이러한 맥락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주제를 질문 형식으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음.
 - MZ 세대(1980년대~2000년대 중반 출생)와 구분되는 알파 세대(2010년대 초반~2020년대 중반 출생)의 특성에 따라 사회 전반과 교육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며, 이러한 변화가 사교육의 양상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 인구구조의 변화나 인공지능의 발달 등으로 예상되는 미래 사회의 변화 속에서 사회·경제적 경쟁은 심화될 것인가, 아니면 약화될 것인가? 의료계 등 특정 직종에 대한 쏠림 현상은 계속될 것인가? 대학 서열화는 유지될 것인가? 이에 따라 ‘명문대학’ 입시경쟁은 심화될 것인가, 완화될 것인가?
 - 경쟁이 지속된다면, 그 경쟁의 내용과 방식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가? 여전히 시험 성적 중심의 경쟁이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 비교과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기록과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한 경쟁으로 변화할 것인가? 대학입시를 위해 준비해야 할 요소는 무엇이며, 이를 학생 스스로 준비하거나 학교의 도움만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 미래 사회에서는 교육에 대한 관점이나 교육 실천에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 것인가? 교육을 사회적 성공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도구적 교육관은 지속될 것인가? 수업 변화의 예상되는 특징은 무엇이며, 교사와 학생의 역할에는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는가? 이러한 변화가 학생의 학습 과정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 미래 교육에서 평가 방식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수능과 같은 국가 수준의 학력 평가 제도는 유지될 것인가? 평가 문항의 형식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학교 교육의 결과는 교과 시험 성적 중심으로 기록될 것인가, 아니면 학습 과정에 대한 다양한 기록으로 확대될 것인가?
 - 사교육 수요 중 하나인 개별 맞춤형 교육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교육이 확대되면, 사교육 수요는 감소하게 될 것인가?

- 사교육 기관은 미래 교육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변화 양상에 맞춰 생존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스스로를 변화시킬 것인가?
- 미래는 수동적으로 맞이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만들어가야 할 대상이기도 함. 어떠한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필요한 변화를 함께 준비하고 실현해 나갈 필요가 있음.

가. 미래 세대의 특성

- 알파 세대(2010년대 초반부터 2020년대 중반까지 태어난 세대)는 MZ 세대와 달리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Prensky, 2001)로, 사회 전반에 디지털화·개인화·참여형 문화 확산, 가치관 및 소통 방식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도 다음과 같은 과제가 예상됨.
 - 알파 세대는 스마트폰, 태블릿, AI 스피커 등 디지털 기기와 함께 성장해, 메타버스, AR/VR, AI 기반 디지털 학습 환경에 익숙함. 이에 따라 학습 공간은 교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 가상·체험·상호작용 공간으로 확장되며, 온·오프라인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교육이 일상화될 것으로 전망됨.
 - 텍스트보다 유튜브, 틱톡, 숏폼 영상 등 시각적 콘텐츠를 선호하고, 이를 직접 제작·소비하는 데 능숙함. 빠른 정보 소비와 즉각적 피드백을 선호하며, 자기 취향에 맞춘 개별화된 학습 경험을 중요시함.
 - 학습이 게임·놀이와 결합된 게이미피케이션 방식으로 전개되고, 체험형·참여형·창작형 교육이 강조될 것임. AI는 개별 학습 데이터와 성향을 분석해 맞춤형 커리큘럼과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하며, 자기주도적 학습과 창의·비판적 사고 중심의 교육이 강화될 것임. 이와 함께 코딩과 AI 소양을 포함한 디지털 리터러시가 기초 소양으로 강조될 것임.
 -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성장 배경으로 인해 디지털 기기 과의존, 사회성 저하, 문해력 저하, 학습 격차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교육적 대응이 필요함.

나. 미래 교육의 변화와 교육과정 및 평가의 방향

- 학령 인구의 감소로 인해 대입 경쟁은 전반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명문대학이나 특정 인기 학과 및 전공에 대한 경쟁은 여전히 유지될 가능성이 있음.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특정 학과나 전공에 대한 선호도에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나, 인기 학과에 대한 선호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좋은 대학, 좋은 학과’를 향한 입시경쟁은 기본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지속되는 한, 입시경쟁 역시 계속될 가능성이 크므로, 지역 간 및 직장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함.
-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화, 직업 선호도의 차이는 임금 격차뿐 아니라 서열을 중시하는 사회문화적 요인에 기인한 측면도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주체성과 자율성, 그리고 가치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원적 관점을 길러줄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학생의 진로 다양화를 위한 진로 교육의 내실화가 요구되며, 국내 경쟁을 넘어서 세계 무대에서 요구되는 미래 역량을 육성하는 교육이 필요함.

- 교수(teaching)보다는 학습(learning)이 중시되어 자기발견 학습(self discovery learning), 자기인식 학습(self awareness learning), 자기조절 학습(self adaptive learning)으로 전환되며, 학생이 학습의 주체로서 학습을 주도함.
 - 전통적인 교육은 주어진 공간에서 교과서를 기본으로 주어진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교사가 가르친 내용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컴퓨터 공학과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교육할 수 있게 됨.
 - 특히 챗GPT 등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는 환경을 가능하게 하여, 학생이 알기를 원하는 것을 찾아서 학습하는 발견학습으로 전환됨. 이를 자기중심 발견학습이라고 하며, 학습자가 학습한 내용의 인지 여부에 따라 학습의 정도가 다르기에 자기인식 학습이라고도 하고, 학습자 스스로 학습 진도를 조절하므로 자기조절 학습이라고도 함(김영수 외, 2024).
 - 교사에 의하여 주도되던 교육이 학습자가 학습을 주도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됨에 따라 학생이 학습의 주체가 됨.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학습의 주체가 되므로 교육과정, 교구·교재 선택, 평가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음.
 - 디지털 학습 플랫폼상에서 구현되는 피드백 시스템은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고, 스캐폴딩과의 상호보완적 관계 속에서 지속적인 학습 향상을 촉진함으로써 학습자 중심의 접근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함.
- 교육과정은 개별화 교육과정으로 전환되고, AI 디지털 교과서와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도입으로 맞춤형 교육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됨. 학습 내용은 교과별로 분절된 지식보다 융복합 지식이 강조되며, 지식의 습득을 넘어 지식을 활용하고 적용하며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내는 사고 및 탐구 역량이 강조될 것임.
 - 생성형 AI 프로그램의 활용으로 개인학습이 가능해지고 알파 세대의 자기중심성 경향으로 인해 개인의 진로와 삶의 계획에 따라 스스로 구성하는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personalized curriculum)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것임.

- 개별화 교육과정에서 교과서는 개인 맞춤 서책형 제작이 불가능하므로 AI 디지털 교과서가 이용될 수밖에 없음. AI 디지털 교과서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지능 정보화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 자료와 학습 지원 기능을 탑재한 교과서로서, 'AI 챗봇' 기능을 포함하여 학생들이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답변할 수 있음.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학습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개인의 능력과 수준, 학습 스타일, 요구에 맞는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피드백이 가능해짐. 이로써 학습 동기를 고취해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가 용이함. 개인 맞춤 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직된 선행학습 금지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함.
- AI 시대에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역량이 중요하며, 지식(knowing)보다 수행(doing)이 강조됨으로써 문제해결 능력, 창조 능력이 중요함. 그러므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지필 검사를 지양하고 수행평가, 포트폴리오, 실험 실습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사회 각 부문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에 필요한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중·고등학교에서부터 관련 교과들을 융합하는 통합적 지식을 배울 수 있게 하여야 함. 예를 들어 문학과 역사가 융합하고, 과학과 문학이 융합하며, 음악과 미술 그리고 무용이 융합하는 종합 예술이 활성화되고 이에 문학과 철학의 내용이 융합할 수 있게 하여야 함.
-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인의 학습 특성을 분석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개별 맞춤형 교육이 학교 교육에서 활성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부족한 학습을 보완하기 위한 사교육 수요는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AI디지털교과서의 도입은 물론 디지털평가(디지털 기술 기반 평가 또는 테크놀로지 임베디드 평가)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됨. 디지털평가는 현재 인공지능 기반 학습분석 플랫폼을 통한 개인화된 맞춤형 피드백과 학습 방향 제시 단계까지 발전하였음(성태제 외, 2024). 미래의 평가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하여 몰입형 환경에서의 문제 해결, 실험 수행 등에 대한 몰입형 평가가 실현될 것이며, 나아가 인간의 인지 및 정서 상태와 기계학습을 결합한 지능형 평가를 통해 학생의 인지적, 정서적 성장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융합형 평가가 가능할 것임.
- 이러한 맞춤형 교육 및 평가의 정교함 수준에 따라 학교 밖 사교육이 제공하는 고급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학교 교육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 기술과 디지털 학습플랫폼의 질을 높이고, 교사의 에듀테크 활용 역량도 함께 강화해야 함.
- 또한 학생 간 AI 활용 능력이나 기기 성능 차이가 학업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지원책 마련이 요구됨.

-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교육은 학교 교육을 넘어 평생학습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언제 어디서든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AI 기반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
- 초연계, 초지능, 초학제의 특징을 갖는 인공지능 시대에 교육평가의 방향은 ① 교육목표, 교육과정, 교수·학습과 통합된 평가, ② 단순지식보다는 융합지식, 창의성에 대한 평가, ③ 수행 중심의 역량 평가, ④ 지필평가를 벗어난 디지털평가, ⑤ 개인화 맞춤 평가의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평가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선택형 문항의 사용이 줄어들고 교육과정 및 수업과 연계된 수행평가 형식의 서술형·논술형 평가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성태제 외, 2024). 이와 같은 평가의 변화는 문제 풀이 요령 중심의 입시 위주 교육을 넘어서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학교 수업의 변화와 학생의 학교 수업 참여도 증진을 가져올 수 있음.
- 서·논술형 평가에서는 '요령' 학습에 의한 성적 향상이 어려우므로 사교육의 효용성이 줄어들 수 있음. 그러나 경쟁이 유지되는 한 다른 학생보다 앞서가기 위한 준비경쟁 성격의 사교육 수요는 유지될 가능성이 있음.
- 서·논술형 평가 문항의 형식 변화가 실제로 사교육의 효과를 낮출 수 있을지에 대해 데이터 기반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며, 문항 유형별 연습 효과와 요령 학습 가능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요구됨.
- 사교육의 효용성이 낮다고 해도 사교육 수요가 줄어들지는 않을 수 있음. 다만, 이러한 경우, 사교육은 학생의 능력을 실제로 길러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인공지능 기술의 변화는 대입 전형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학습자의 학습 과정과 다양한 경험을 전형 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러한 자료를 AI가 분석함으로써 지원자의 특성이 대학별 인재상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됨.
- 이 같은 변화는 모든 학년의 자료가 전형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관리와 컨설팅을 위한 사교육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과도한 자료 요구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전형 자료의 유형과 범위가 확대되면, 자료의 신뢰도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 인공지능 관련 윤리 이슈도 함께 제기될 수 있으므로, 교육 분야에서의 AI 윤리 원칙 마련과 보완이 중요함.

다. 미래의 사교육 전망

- 미래 교육의 변화에 따라 사교육 수요가 증가할지 감소할지를 예측하기는 어려움. 이는 미래 교육 변화 중에는 사교육 수요를 줄이는 요인과, 반대로 수요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요인이 공존하기 때문임.
 - 사교육 수요 감소와 관련되는 요인으로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입시경쟁 완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맞춤형 학습 확대, 정교해진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통한 고품질 강좌 접근성 향상 및 비용 부담 완화, 평가 및 대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학교 수업 참여도 제고 등이 있음.
 - 사교육의 유지 또는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사회·경제적 경쟁의 지속으로 인한 명문대 및 인기 학과에 대한 경쟁 유지, 사교육 기관의 혁신과 고품질 서비스 개발 가능성, 대입 전형 변화에 따른 학교생활 관리 및 컨설팅 중심의 고액 서비스 확대 가능성 등이 있음.
- 사교육 수요의 증감 예측뿐 아니라, 사교육의 내용과 방식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함.
 - 사교육 시장 역시 온라인 플랫폼 활용, AI 튜터를 통한 맞춤형 콘텐츠 제공과 개별 피드백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교육 서비스로 빠르게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 학교 평가 방식이 서술형·논술형 평가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기존의 정답 찾기 중심 수업은 점차 줄어들고, 교육과정에 충실한 수업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큼. 이에 따라 단순 지식 전달에서 벗어나 프로젝트 기반 학습, 토론 학습 등 학생의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사교육도 변화할 가능성이 있음.
 - AI 소양과 디지털 역량이 강조됨에 따라, 코딩, 데이터 과학 등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사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으며, 개별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진로 교육 관련 사교육 시장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음.
 - 알파 세대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교육 시장에서도 AI·메타버스 기반의 맞춤형·참여형·체험형 학습이 강조될 가능성이 있음. 특히 공교육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 학습 분석과 피드백의 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고급 사교육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음.
 -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교육적으로 타당하고 적절한지를 점검하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교육적으로 부적절한 사교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억제해야 하며, 교육적 가치가 있는 사교육 활동에 대해서는 이를 공교육에 흡수하거나 연계·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사교육 경감 정책의 기본 방향

- 사교육 경감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교육 대응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가. 사교육 유형의 다양성을 고려한 접근

- 사교육의 유형은 다양하며, 각 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 II장 3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돌봄 수요에 의한 사교육과 입시경쟁을 위한 사교육을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사교육의 효과나 특성 측면에서 교육적인 가치가 있는 사교육과 비교육적인 사교육을 구분해 볼 수 있음. 모든 유형의 사교육을 일률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바람직한 교육적 요구를 외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맞벌이 가정의 돌봄 수요에 의한 사교육(방과 후 생활 지도와 생활 관리를 위한 사교육)에 대해서는 이를 지역사회 공동체 등 공적 기관을 통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부족한 부분의 보완 등 개별 맞춤형 사교육 수요, 개인의 능력 계발을 위한 사교육(예술, 체육, 문화재 탐방, 독서 토론 등) 수요 등에 대해서는 이를 학교 교육에서 적극적으로 흡수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공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입시경쟁에 따른 사교육 수요로서, 선행학습이나 문제 풀이 요령 학습에 대한 사교육 수요를 학교 교육에서 수용하는 것은 전인적 발달과 개념 학습 등 교육 본연의 과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함. ‘입시 위주’ 사교육 수요의 원인을 ‘공교육의 부실’로 규정하는 관점은 교육의 본말전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함.
 - 높은 지위와 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명문대학 입학 경쟁 사교육은 ‘군비경쟁’ 성격의 무한경쟁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학교 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더라도 유지될 수밖에 없으며, 임금 격차 완화, 양질의 일자리 확충 등 근원적인 수준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사교육 기관의 과장 광고(‘공포 마케팅’)에 의한 ‘비교육적 사교육’과 사교육을 당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 사교육 효과에 대한 막연한 기대에 의한 ‘일상화된 사교육’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학부모의 사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나. 사교육 과열 현상에 대한 근원적·원칙적·단계적 접근

- 사교육 문제에 대한 ‘대증적 접근’은 한계가 있으므로 ‘근원적 접근’이 필요함. 예를 들어, 사교육의 원인이 되는 대학입시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험 범위와 시험 대상 과목 수의 축소, 수능 난이도 하향 조정, 대입 전형 요소의 조정 등이 추진되었으나 경쟁의 부담과 사교육 수요는 줄여주지 못한 채 ‘실수 안 하기 경쟁’을 위한 사교육 심화 등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음.
 - 근원적 접근을 위해서는 대입 정책과 평가의 방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점검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대입 정책의 방향에 대한 기본 원칙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 국가(교육부 등)는 학교에 정착되지 않는 전형 요소를 대입 제도에 반영하도록 요구하지 않아야 함.
 - 대학은 초·중등 교육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입학제도를 자율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다만, 대학은 고등학교에서의 평가 내용에 근거하여 학생을 선발하도록 권장함.
 - 고등학교는 학교 교육에 충실하여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기하고 학생 평가를 공정하게 하여 타당하고 신뢰로운 대학 입학전형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대학 입학 정책 수립에 불간섭, 대학의 입학 정책 자율성 강화, 고등학교의 학교 교육 내실화 및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좀 더 근본적인 수준에서는 대입 경쟁을 가져오는 사회·경제적 경쟁의 현상과 교육열의 사회·문화적 배경, 사교육을 유발하는 교육 정책과 교육 현실의 특징, 그리고 사교육 기관의 전략과 상술 등을 종합적·구조적·입체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사교육을 유발하는 여러 요인에 대한 구조적·입체적 분석을 바탕으로 사교육 경감을 위한 방안을 단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함. 실효성 있는 사교육 경감 방안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추진되어야 다음 단계의 추진 과제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을 것인지를 세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음.

다. 교육적 가치 중심의 접근

- ‘교육적 가치’를 중심으로 학교 교육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춤.
 - 정치·경제적 관점의 접근보다는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함. 특히 수요자가 원한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문제 풀이 중심의 입시 위주 수업’ 등 교육적 원칙에 어긋나는 수업을 실시하도록 요구하지 않아야 함.

- 사교육 경감을 위한 평가제도나 대입제도 개선에서는 사교육 부담 경감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충실한 이수를 존중하고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예: 시험 대상 과목 축소보다 충실한 교육과정 이수를 중요하게 고려; 교과 중심의 대학별 고사를 무조건 막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과 교육을 존중하며 평가 내용의 적절성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 사교육의 긍정적 교육 효과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연습 기회의 부여, 수준과 오개념 등을 고려한 개별 맞춤형 지도의 효과, 소규모 학습 단위 구성에 의한 학습 참여도 증가(질문하기 등의 용이성), 돌봄 기능 수행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음. 학교에서 제공해 주기 어려운 예·체능 사교육, 문화재 탐방 사교육 등은 학생의 실제 역량 함양에 도움이 됨.
 - 교육적 가치를 갖는 사교육 수요(예: 소규모 수업과 개별 맞춤형 수업에 대한 수요)와 비교육적인 사교육 수요(문제 풀이 요령 중심 수업에 대한 수요)를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상이한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긍정적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학교의 시설과 환경의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사교육의 긍정적 효과 가능성을 고려하면, 사교육 대응 정책 수립에서는 ‘경쟁 부담 관리 중심 접근’과 함께 ‘경쟁 내용 관리 중심 접근’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부담의 적정 관리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경쟁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타당하며, 공정성의 가치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경쟁 체제에서 앞서가기를 위한 사교육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경쟁을 인정하되 이를 교육적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경쟁의 내용과 그 방향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라. 공교육 환경 개선과 교사의 권위 회복을 중시하는 접근

- 그동안 추진되었던 사교육 정책의 주요 키워드의 하나는 공교육의 경쟁력 제고임. 이러한 관점은 사교육 확산의 원인을 학교 교육의 미흡함에서 찾는 것으로, 학교와 교사의 ‘노력 부족’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기도 함.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사교육 기관에 비해 열악한 학교의 교육 환경과 여건을 도외시키고 있으며, 따라서 공교육의 실질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그 핵심 조건인 학교 교육 환경과 여건 개선을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우수한 인적 자원이 교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교원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임금은 물론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아울러 교사의 전문성 함양에 필요한 체계적인 연수 교육의 기회(대학원 진학 지원 포함)를 확대하고 강화해야 함.

- 학생 개개인에게 적합한 맞춤 교육과 학생 참여가 강화된 수업 활동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화하여야 하며, 인공지능 시대에 부합하는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해야 함.
- 사교육 경감을 위한 근원적 대책의 하나인 평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교사의 평가 전문성 발달을 지원함은 물론 학교와 교사의 평가 자율성 및 권한을 존중하는 교육 공동체 문화 형성이 필요함.
 - 과도한 경쟁에 따라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미래지향적 평가 패러다임의 전환이 어려움. 예를 들어 서·논술형 평가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채점의 객관성 논란에 대한 우려로 도입을 망설이고 있음.
 - 이러한 이유에서 사교육 경감 정책의 수립에서는 학교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교사의 교권과 권위를 회복하는 데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3 중장기 유·초·중등 사교육 경감 정책 방안

가. 유아교육 시기의 사교육 경감 정책 방안

1)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 모든 유아가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위해 유아교육의 완전 무상화를 실현할 필요가 있으며 유아기 의무교육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모든 유아는 지역이나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책무임.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유아교육의 완전 무상화가 필요함.
 - 현재 일부 연령과 조건에 따라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나, 부모가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여전히 존재함. 이는 계층 간 교육 기회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따라서 완전 무상화를 통해 모든 유아가 동등한 출발선에서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더 나아가, 유아교육의 의무교육화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3~5세 유아기는 전인적 발달에 있어 결정적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에서는 유아교육이 선택적 참여에 머무르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는 ‘출발선’부터 나타나는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 한

계가 있음. 따라서 의무교육으로의 전환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모든 유아에게 공정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최근 조사에 따르면 유아교육기관에 재원하는 유아와 가정에서 양육되는 유아 간의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약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유아교육기관 재원 여부가 사교육 의존도와 교육비 부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임. 이는 교육 형평성 측면에서 유아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 및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함.
- 교사의 교육적 역량이 온전하게 발휘되어 유아교육기관이 질 높은 놀이중심·유아중심 교육과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유치원의 학급 수와 학급당 최소 및 최대 유아 수는 유치원의 유형,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정하도록 되어 있음. 예를 들어, 경기도 교육청은 2023학년도 공립유치원의 학급당 유아 수 기준을 만 3세는 14명 이상 18명 이하, 만 4세는 20명 이상 22명 이하, 만 5세는 24명 이상 26명 이하로 정함.
 - 유아 개개인의 발달 수준과 흥미를 충분히 고려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유아 수를 감축하는 것이 필수적임. 과밀학급에서는 개별 유아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상호작용이 어려워, 유아교육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음.
 - 교사의 교육적 역량이 온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보조인력 및 지원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유아의 생활 지도, 안전 관리, 행정 등을 보조할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어야 교사는 교육과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음.
- 유아의 자율적 놀이 기회와 휴식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질 높은 방과후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함.
 - 유아의 발달 특성과 하루 일과의 균형을 고려할 때, 방과후 과정은 학습 중심이 아닌 놀이와 쉼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함. 그러나 현재 일부 기관에서는 방과후 시간에도 사교육적 요소가 개입되거나, 반복적인 학습 활동이 편성되는 등 본래 방과후 교육의 취지에서 벗어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유아의 자율적 놀이 기회와 휴식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질 높은 방과후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함.
 - 일부 기관에서 지침에 어긋나게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지도·감독 체계를 강화하여 제도적 틀 안에서 방과후 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함. 특히 사적 이익이나 학부모 요구에 의해 방과후 과정이 비공식 사교육 형태로 변질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우수 운영 사례를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함.

2) 과도한 유아 사교육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 유아 발달에 적합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교육 기관 운영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일부 유아 대상 학원이 공교육 기관과 동일한 오전 시간대에 운영되면서, 유아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정규 교육기관 대신 학원에 다니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이는 유아가 공교육 기관에서 경험해야 할 발달적으로 적합한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공교육의 기능을 위협하고 있음.
 - 따라서 유아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공교육 기관의 정상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방안(예: 오전 시간대 유아 대상 학원 운영을 제한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유아 발달에 부합하지 않는 선행학습 중심 사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일부 유아 사교육 기관에서는 유아의 발달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조기 문해, 조기 수리, 영어 몰입교육 등 선행학습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이는 유아의 자발적 탐색과 놀이 활동을 제한하고, 학습 피로도와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전인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실효성 측면에서, 전면적 규제보다는 유아 발달에 적합한 방향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적 접근이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사교육의 방향성이 건전한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유아 사교육 기관의 명칭 사용에 대한 법적 기준을 강화하고, ‘유치원’이라는 용어를 법적·제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함.
 - 유아 대상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법적으로 유치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기관인 것처럼 오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는 부모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사교육 기관이 공교육의 신뢰와 위상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 따라서 유아 사교육 기관의 명칭 사용에 대한 법적 기준을 강화하고, ‘유치원’이라는 용어를 법적·제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함.

3) 공공 돌봄 프로그램 강화

- 맞벌이 가정 유아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공간을 확보하고, 기관-가정 간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공공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함.
 - 맞벌이 가정의 유아 돌봄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공공 돌봄 서비스

는 대부분 초등학생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어, 유아기 자녀를 둔 가정은 사실 인력이나 친인척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 이에 따라 지자체 중심의 공공 돌봄센터를 확충하고, 그 이용 대상을 유아까지 확대하는 것이 시급함.

- 더불어 유아 맞춤형 돌봄 인력과 시설 확충이 병행되어야 하며, 단순 보호 중심의 돌봄이 아니라 발달 단계에 맞춘 놀이 중심·정서 지원 중심의 유아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 이를 위해 유아교육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정기적인 연수와 지도체계를 마련하여 돌봄의 질을 보장해야 함.
- 지역사회 기반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해 유아 누구나 문화예술과 체육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
 - 유아기의 예술 및 체육 활동은 신체 발달뿐만 아니라 창의성, 사회성, 감정 조절 능력 등 전인적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영역임. 그러나 현재 유아 대상의 예술·체육 프로그램은 사설 학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여건에 따라 접근성에 큰 차이가 발생함.
 - 지역사회의 공공 체육시설이나 복지시설 등을 이용한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은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유아의 흥미·재능 발견, 정서적 안정,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도울 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 부담도 완화하는 효과를 가짐.

4) 유아 사교육 통계 수집 및 공시

- 유아기 사교육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그 영향을 평가하며 정책적 대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유아 사교육비 및 참여 형태에 대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실태 조사와 통계 공개가 필요함.
 - 현재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는 매년 국가 차원의 사교육비 실태 조사와 통계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유아기에 대한 공식적인 사교육 통계는 거의 부재한 상황임. 이로 인해 유아 사교육의 실태가 정책적으로 논의되기 어렵고,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역시 낮은 실정임.
 - 유아기 사교육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그 영향을 평가하며 정책적 대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유아 사교육비 및 참여 형태에 대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실태 조사와 통계 공개가 필요함. 조사 범위에는 가정 외부 사교육뿐 아니라, 유아교육기관 내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을 통한 사교육도 포함되어야 함.
 - 이러한 정보 수집과 공개는 유아 사교육의 규모, 비용, 내용, 참여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사교육이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공공 대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음. 특히 지역별·계층별 사교육 격차를 분석하여 정책 지원이 시급한 집단을 선별하고, 사회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근거 기반 정책 설계가 가능해짐.

- 사교육의 실제 효과와 한계를 부모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과 교육이 필요함.
 - 많은 부모가 조기 사교육이 자녀의 학습 능력 향상과 초등학교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교육이 장기적인 학습 흥미 저하, 스트레스 증가, 정서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존재함.
 - 반면, 유아기의 놀이 중심, 경험 중심 활동이 인지·정서·사회성 발달에 더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근거도 충분히 축적되어 있음. 이러한 사실을 학부모가 이해하고 실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교육의 효과와 한계를 정확히 설명한 정보 제공과 교육이 필요함.

나. 초등교육 시기의 사교육 경감 정책 방안

- 초등교육 시기의 사교육 경감 정책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된 사교육 경감 정책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공교육 구조 개편’, ‘제도적 혁신’, ‘사회문화적 인식 및 환경 개선’이라는 세 축에서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국회입법조사처의 『초·중·고 사교육비 변화 추이 분석 및 향후 과제』(이덕난·유지연, 2022.04.28.)와 교육부(2023.06.26.)가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 내용을 바탕으로 그동안의 사교육 경감을 위한 정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표 IV-1 > 역대 정부 사교육 정책 주요 키워드(2009~2022)

- 공교육(경쟁력 향상, 강화, 정상화, 내실화), 정규수업 내실화, 학생 참여 중심 교육과정, 과정 중심 평가
- 기초학력(국가책임, 교과보충, 대학생 튜터링)
- AI기반 온라인 맞춤형 학습시스템
- 돌봄(지역사회 연계, 온종일)
- 방과후학교(수요자 중심/맞춤, 강화, 확대)
- 사교육 수요 흡수(영어, 수학+예·체능)
- 선행교육 규제

< 표 IV-2 > 최근의 사교육 경감 대책(2023)

사교육 대책	중점 추진 방안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교육부, 2023.06.21.)	• 국가책임 기초학력·기본인성 교육 • 디지털 기반 교실수업 혁신(하이터치-하이테크) • 학생의 다양한 교육 선택 기회 확대 •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사교육 경감 대책 (교육부, 2023.06.26.)	• 늘봄학교 중심 돌봄 사교육 경감 • 방과후과정 내실화로 비교과 체육·예술 사교육 흡수 • 다양한 초등 교과 사교육 문제 해소(디지털 새싹 캠프 등) • 방과후 프로그램 제도 개선(지원범위 확대 등)

1) 공교육 구조 개편을 통한 생태계 전환

- 학교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공교육 경쟁력 강화가 필요함.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사, 수업, 환경, 시스템, 사회 인식 전반에 걸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
 -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고,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개선하며, 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꾸준한 교사 연수와 재교육 정책이 필요함. 음악, 미술, 체육, 영어 등 실기·활용 중심의 역량이 중요한 교과와 경우,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확보하여(예: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조정과 초등 교과전담교사제의 법제화 등을 검토) 내실 있는 수업을 운영함으로써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음.
 -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여 개별 맞춤형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가 기초학력을 책임 있게 보장하여 공교육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함.
 - 이러한 질적 전환은 단기적 성과보다는 교육 구성원 간의 중장기적 신뢰를 확보하고, 커지고 있는 학습 격차 해소를 목표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사교육 의존의 교육 문화에서 공교육 중심의 미래 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이끌어야 함.
- 사교육 수요와 돌봄 수요에 대응하되, 학교 교육의 본질과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함.
 -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과 공적 돌봄이 일정 부분 흡수하는 것은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학교 교육의 본질과 정체성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충분한 준비와 숙고 속에서 추진되어야 함.
 - 그동안 초등 돌봄과 방과후 프로그램이 최근 늘봄으로 통합되며 폭넓게 자리 잡아가면서, 학교가 다양한 교육과 돌봄 수요를 함께 담당하게 됨. 이 과정에서 도입 취지와 달리 학교의 돌봄기관화·학원화, 교육의 외주화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함. 이러한 변화는 교

원들의 교육활동 집중도를 약화하고, 공교육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공교육 경쟁력 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음.

- 돌봄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학교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은 학교 교육의 목적과 경계를 충분히 고려하며, 본연의 역할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획·운영되어야 함. 무엇보다 ‘학교의 공백 시간은 곧 학습·돌봄 서비스로 채워야 한다’는 접근은 공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
- 늘봄(돌봄 및 방과후 프로그램)은 학교 운영과 구분해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별도의 체계로 설계·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학교 시설이나 지역사회의 공간을 활용하되, 기획과 운영의 주체성을 분명히 하여 공적 책임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함. 이러한 방식으로 국가-지자체-학교가 협력하는 모델을 통해 학교는 교육에 전념하고, 지자체는 돌봄과 학습 지원을 전문적으로 담당해 공교육의 질과 돌봄의 질을 함께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학교의 본질적 교육활동을 보호하며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자체 중심의 전문적 돌봄 체계로 늘봄의 질까지 함께 끌어올리는 균형 잡힌 공적 시스템 구축을 중심에 두어야 함. 이러한 정책이 자리 잡을 때,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도와 공교육의 신뢰, 지속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초등 사교육 경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

2) 미래형 학습 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 혁신

- 사교육 수요를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미래형 교육과정을 설계함.
 - 앞으로의 교육은 초개인화와 그에 따른 맞춤형 학습 체제로의 변화가 예측됨. 학교 교육 역시 진도 중심에서 벗어나 개인별로 학습경로를 밟으며 성취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별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이를 통해 선행학습의 필요성과 사교육의 수요를 줄이고,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맞는 학습을 제공하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
 - 또한 사회·정서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과정이 필요함. 사회·정서 역량은 기술 발전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사회에서 개인의 올바른 성장뿐 아니라 건강한 사회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필수 역량으로 주목받고 있음. 이는 사교육이 다루기 어려운 영역으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공교육이 주도하는 핵심 영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음.
- 사교육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를 개선함.
 - 학생 수준을 고려한 서술형·논술형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각 학년의 발달과 개인의 수준에 적합한 문항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도 답안 작성법에 대한 사전교육이 필요함. 자기 언어로 사고를 구성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중요하게 되면 암기 위주의 문제풀이식 사교육 효과에 대한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음.

- 고등 정신 능력(분석력, 추론력, 종합력, 창의력)과 핵심역량 기반의 수행평가를 통해 학생의 성장을 보여주는 평가로서 과정에서 결과에 이르는 다중적인 평가 요소를 반영해야 함. 비정형적이고 복합적인 사고와 핵심역량의 평가는 사교육 의존으로는 대비하기 어렵고, 공교육의 수업과 평가 변혁을 통해 가능함.
- 이를 위해 교사가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평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충분한 준비 시간과 행정적 지원을 보장하며, 서술형·논술형 평가가 단순히 점수화되어 입시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교육적 목적을 공유하는 평가 문화가 함께 정착되어야 함.
- AI 기반 공공 교육 플랫폼을 고도화하여 학생의 사교육 의존도를 낮춤.
 - AI 튜터 기반의 개별 학습 분석 시스템을 구축해 오개념 파악, 학습 이력 관리, 협업 활동 기록 등을 반영한 성장 보고서를 제공하며 학습 전반을 지원함. 고도화된 공공 교육 플랫폼은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며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 데 기여함.
 - AI 기반 시스템을 통해 교사의 행정 업무를 경감하고 수업 설계를 지원하여 개별 맞춤형 수업과 피드백이 강화되는 수업 환경 조성이 필요함. 교사가 깊이 있는 교육 활동에 전념하고 학생은 공교육 내에서 질 높은 학습 경험을 누리며 사교육 대체 가능성을 확대함.

3) 사회·문화적 인식 전환 및 지역 기반 교육 환경 조성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교육의 강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교육의 문제점을 이해하게 하여 공교육과 사교육에 대한 인식을 전환함.
 - II장 3절 나항의 <표 II-6>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와 [그림 II-4] 학부모의 사교육 관련 불안 정도에 대한 자료를 통해 학부모의 심리가 사교육 발생의 큰 원인 중 하나임을 짐작할 수 있음.
 -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정기적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영상이나 카드뉴스 등의 콘텐츠를 제작·활용함으로써 학부모에게 공교육의 강점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사교육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 이를 통해 자녀 교육에 대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교육 불안을 완화함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지나친 사교육 의존을 줄이는 기반을 마련함.
- 초등학교의 다양한 경험에 대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주도하는 공공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사교육의 대체 수단을 제공함.
 - 초등 사교육은 단순한 입시 목적 외에도 ‘다양한 경험’을 충족하려는 수요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많음. 이에 따라 도서관, 문화센터, 마을교사, 지역 전문가와 같은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독서, 체험, 탐구 등 넓고 다양한 영역의 공공 프로그램을 활성화

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일회성 체험형 프로그램을 넘어, 정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공 프로그램 체계가 구축되고 학생의 흥미·역량·경험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함.

- 이를 위해 지자체와 시·도교육청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공공 프로그램 성과지표 개발 및 점검, 지자체 보조사업 연계 확대와 같은 제도적 기반과 함께 공공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제 도입 등 질적 관리도 병행되어야 함. 공공 프로그램 확대는 학부모에게 다양한 사교육 대체 수단을 제공함과 동시에 공교육의 보완 기능과 지역사회 교육력 제고에도 기여함.

- 사교육 유인을 조장하는 구조적 환경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함. 사교육의 확산은 공교육의 한계나 학부모의 불안뿐 아니라 사교육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구조적 환경에서 비롯되기도 함.
 - 불투명한 사교육 정보 제공과 무분별한 마케팅, 지역 간 교육 서비스 격차 등은 학생과 학부모를 사교육에 의존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따라서 사교육 유발 환경에 대한 실태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하며, 사교육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정보 등을 객관적으로 제공하여 학부모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해야 함.
 - 이와 같은 사교육 환경 구조 점검 및 제도 개선은 사교육의 과잉 확산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다. 중등교육 시기의 사교육 경감 정책 방안

1) 입시제도 및 학생 선발(평가) 방법의 변화를 통한 사교육 경감

- 중등교육 시기의 사교육 경감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평가의 혁신이 필요함. 현재의 평가 모습과 중장기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평가의 방향을 도식화하면 [그림 IV-1]과 같음.

[그림 IV-1] 중등교육 사교육 경감을 위한 평가의 변화 방향

평가의 현재 상황	중·장기적 평가의 발전 방향
상대적 비교 (상대비교평가)	성장의 기록
학기말 점수·등급화	학습과정평가(교사의 피드백) + 학습내용기록(디지털 포트폴리오)
결과를 선발에 활용	과정을 성장에 활용 + 과정 + 기록을 선발에 활용
시험에 중요도 집중	과정 전체로 중요도 분산
[사교육] 시험점수 향상에 초점	[사교육] 학습의 과정과 내용에 초점
※ 수업의 방향 • 시험범위(진도)를 가르치는(전달) 수업량 집중 • 학생의 수동적 학습	※ 수업의 변화 • 학생의 탐구·성장에 집중하는 깊이 있는 학습 •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한 역량 강화
수업과 평가의 분리	수업 + 평가 + 기록의 일체화

- 평가 방법 혁신 방안을 통해 사교육 경감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로드맵을 참고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표 IV-3> 참조).

< 표 IV-3 > 평가 방법 혁신을 통한 사교육 경감 현실화 방안 로드맵

1단계: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정책 설계	
교육 주체별 의견 수렴 및 공감대 형성	학부모, 학생, 교사, 대학 등 모든 교육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새로운 평가 방식의 필요성 및 장점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 형성. 특히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감 해소 및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현행 입시 제도 개편 및 새로운 평가 방식 도입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 (예: 교육부 고시, 관련 법률 개정).
평가 지표 및 기준 개발	학생의 성장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와 기준 개발 (예: 탐구 활동, 프로젝트 학습, 협력 학습 등).
AIDT 기반 디지털 포트폴리오 시스템 구축	학생의 모든 학습 과정과 평가 내용을 디지털로 기록·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보안성, 접근성 확보 및 학생 개개인의 학습 데이터 축적·분석 기능 포함.

2단계: 교육 현장 역량 강화 및 시범 운영	
교원 연수 및 전문성 강화	교사들이 새로운 평가 방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생 성장 중심 평가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 제공. 교사의 평가 전문성에 기초한 평가 권한 및 자율성 확대.
수업-평가-기록 일체화 모델 개발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수업-평가-기록’ 일체화 모델 개발 및 교사 활용 지원. 우수 사례 공유 및 확산.
선도 학교 지정 및 시범 운영	특정 학교를 선도 학교로 지정하여 새로운 평가 방식 시범 운영 및 문제점 파악 및 보완.
대입 전형 연계 방안 모색	디지털 포트폴리오가 대입 전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대학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연계 방안 마련 (예: 서류 평가, 면접 등 활용).
3단계: 점진적 확대 및 지속적인 개선	
단계적 확대 적용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미비점을 보완한 후, 새로운 평가 방식을 전국 학교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평가 결과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디지털 포트폴리오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방안 마련 (예: 평가자 교육 강화, 평가 기준 명확화, 이의 신청 절차 마련).
사교육 경감 효과 분석 및 피드백	새로운 평가 방식 도입이 사교육 경감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보완 및 개선.
기술 발전과의 연계	AIDT 기술 발전에 발맞춰 디지털 포트폴리오 시스템 지속적 업데이트 및 고도화 (예: 데이터 분석을 통한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기능 강화, AI 기반 평가 보조 도구 개발).

- 입시의 중요성이 여전한 현실에서 사교육 경감을 위한 해법은 평가의 주요 내용을 학습 전체 과정에서의 학생 성장 과정 평가로 전환하고, 이러한 평가의 내용을 기록하여 대학이 학생 선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변혁하는 것임.
 - 교육을 바꾸려면 입시에 활용되는 평가가 학생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교육’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선발의 기준이 되는 평가 내용과 방법을 혁신하여 시험 준비가 아닌 ‘공부’를 하는 교실을 만들어야 함. 학생의 탐구와 활동 중심 수업 설계로 자기 수준에 맞는 능동적인 배움을 펼쳐나가고 이러한 배움의 과정(탐구·활동 내용)이 평가의 내용이 되어야 함.
 - 평가는 누가 더 잘했는가를 확인하는 평가가 아닌, 수업과 연계되어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 속의 평가이어야 함.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을 일체화하는 시스템을 구성하고, 학생의 학습 내용과 활동을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포트폴리오로 기록하여 대입 전형 자료로 활용함.

- 이러한 변화는 일회성 시험의 점수를 높이는 것에 특화되어 있는 사교육을 자연스럽게 감소시킬 수 있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음. 수행평가를 도와주는 사교육도 있지만 평가의 내용과 기준 자체가 학생들의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 방식으로 전환된다면 사교육의 영향력은 줄어들게 됨.

- 중·장기적으로 성장·역량 중심의 수업 및 평가 방식으로의 변화를 추진하며, 이와 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대입제도 개편을 추진함.
 - 기존의 고등학교 평가 방식은 상급학교 진학자료로의 활용이 법적으로 강제될 정도의 선발·분류 중심 평가로서, 성장참조평가로의 변화가 요구됨. 서열화된 평가에서 벗어나 학생의 학습 과정과 성장에 초점을 둔 평가로의 변화가 필요함.
 - 급격한 교육의 변화는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여 사교육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미래 사회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력, 협력적 문제해결력을 키워줄 수 있는 수업 및 평가 방식으로의 점진적 변화가 요구됨. 이를 위해 중·장기적 계획하에 수업을 탐구형 수업방식으로 전환하고, 창의력·문제해결력 중심의 서·논술형 평가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학생 개인별 맞춤형 평가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시대가 요구하는 총체적 역량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는 현행과 같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학 입학전형 요소로서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거나 최소 학업능력 검증 도구로만 활용함. 중·장기적으로는, 공교육의 수업과 평가 방식의 변화가 선행된 이후, 수능에 서·논술형 평가를 점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대학의 신입생 선발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회적 격차 완화를 위해 놓여준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대입 정책의 확대가 필요함.

* (예) 대학/학과/전공 주도의 자율적 선발제도 확대, 지역균형·기회균형 선발제도 확대

- 미래형 대학입학전형제도 수립을 위한 정책 방향은 아래와 같음.
 - 대학 설립과 교육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대학 특성화를 위한 교육과 학생 선발을 위한 전형 요소(AI literacy, 디지털 리터러시, 미래 역량 등 측정, 서·논술/ 면접·관찰, 수행평가: 실험·실습, 모의 실행, 작품, 연주 등, 포트폴리오 등)에 자율권을 부여해야 함.
 - 신입생 모집단위(수시의 학생부 선발에서 비교과 전형의 자율적 확대, 수시의 학생부 선발에서 교과 전형시 성장참조평가 적용, 학생 선발에 대한 무한 책임, 고등학교의 특성을 파악한 학생 선발)의 자율권과 학사 행정의 자율권(대학에서 입학 정보 공개와 무상의 입학 상담 기능 극대화, AI 면접 등)을 부여해야 함.
- 고등학교의 특성에 맞는 내신 평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함.

- 고등학교 설립과 교육 목적에 충실할 수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입시에 종속되지 않는 학교 교육의 독립성에 의한 내신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내신 평가의 자율성과 전문성 그리고 책무성이 요구되며 내신 평가 방법의 자발적 공개를 통한 학교 특성 홍보와 공지의 적극성과 투명성이 요구됨.
- ‘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를 통해 학생이 공부한 모든 내용과 특징이 수록되고 이러한 내용이 입시에 활용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함(현재는 경쟁 요소가 교과성적 하나이므로 과열 경쟁을 유발하여 내신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음).
- 교사의 평가 전문성 확보를 위한 평가 권한 확대와 법적 보호가 필요함.
- 서열화 중심의 상대평가 내신을 개별 학생의 성취도를 측정하는 평가로 전환함.
 - 고등학교의 상대평가 내신은 개별 학생의 절대적 학업성취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기초학력 부실화 및 사교육에 대한 과수요를 유발함. 절대평가를 실시하는 중학교 단계에서도 고등학교의 상대평가에 대비하고자 사교육을 통해 상대적 위치를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가 발생함.
 - 고등학교 내신 절대평가 개편 시 성적 부풀리기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며 특히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근거한 성취도 평정의 신뢰도와 타당성 확보가 관건임. 이를 위해 가칭 성취기준별 성적표 등을 통해 교과별 학업성취 상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학업성취 상황과 정보를 제공한다면 성취평가 성적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 및 사교육 경감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음.

2) 미래 시대에 맞는 공교육 역량 강화를 통한 사교육 경감

- AI·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개별 학생 맞춤형 학교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야 함.
 - 학생 및 학부모가 원하는 양질의 맞춤형 교육 제공을 위한 여건 개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교원의 책무감 수행에 따른 교권 확립과 교권보호정책의 강화가 요구됨.
 - * (예) 적정 학급당 학생 수 보장, 기초학력진단 시스템 고도화, 개별 학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 및 역량 있는 교원 추가 확보, AI 디지털 교과서의 인공지능 분석 기능을 활용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업무 지원 등
 - 빅데이터, AI 등을 활용하여 개별 학생의 소질과 적성, 수준을 고려한 개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동시에 자기주도학습 및 진로·진학 지원 체제 강화가 필요함.
 - * (예) 서책형 교과서와 함께 AI 디지털 교과서 제공(AI 보조교사, AI 학력진단평가, 학습활동 데이터 분석·추천·예측 등 기능 탑재), 개별 학생 맞춤형 온라인학습 및 중하위권 학생을 위한 자기주도학습 멘토링 지원, 개별 학생 맞춤형 대입 컨설팅(학교생활기록부 진로 관련 활동 등) 및 대입 정보 제공 확대 등

- 국가 수준에서 질 높은 디지털 학습 플랫폼(chatGPT나 Khanmigo 등)을 개발하고 생성형 AI를 탑재하여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게 하며, 다음 단계의 학습 내용을 안내하고 제공하는 등 개별 맞춤형 학습경로를 지원함.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넘어서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융합 지식을 제공하고, 교사가 큰 부담 없이 개별 지도하도록 지원하며, 학생들 또한 어려움 없이 자기주도학습을 이끌어가도록 안내해 주어야 함.

3) 문제가 되는 사교육 규제를 통한 사교육 경감 (단기 정책)

- 편법·불법 사교육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함.
 - 거짓·과대광고는 학부모의 사교육을 부추기며, 과도한 고액 사교육, 과잉 선행 사교육과 심야 사교육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학생들의 삶을 불행하게 하므로 억제가 필요함.
 - * (예) 사교육 실태 모니터링 및 편법·불법 사교육 기관 관리·감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사교육 관리센터 설립 등에 관한 연구와 실행
- 현실성 있는 사교육 모니터링을 위한 통계 자료 수집 체제를 구축함.
 - 교육부·통계청이 매년 공개하고 있는 사교육비 규모(2024년 기준 총 29.2조 원)는 초·중·고만을 대상으로 조사된 통계로서,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유아 사교육 및 N수생의 사교육 실태를 반영하지 못함. 현실성 있는 사교육 모니터링을 위해 유아 및 초·중·고와 N수생을 모두 포함한 사교육 통계의 구축이 시급함.
 - * 통계청은 2024년 하반기 유아 사교육비 시험 조사, 2025년 N수생 사교육비 시험 조사를 계획하고 있지만, 유아 및 초·중·고와 N수생 데이터의 연계(조사 시기, 방법, 대상, 사교육 범위, 유형, 측정 방법 등)를 고려한 통계 구축 필요
- 사교육 기관의 과도한 선행 교육에 의한 폐해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함.
 - 과도한 선행 교육은 학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교사의 정상적 수업을 방해하며,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그러나 현행 법률은 사교육 기관의 선행 교육에 대해서는 일체의 제재 규정 없이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광고’에 대해서만 금지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법령상 처벌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학교에서는 금지된 비교육적인 선행 학습이 사교육 기관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통상적 예습이나 심화학습과는 구별되는 과도한 선행 교육(예: 학교급 이상)의 법률적 규제책 마련이 필요함(예: 사교육 기관에서 운영하는 상품별 진도 정보를 학원의 정보 공시 항목에 추가하는 방안 등).

4) 학부모의 부담이 되는 사교육 흡수를 통한 사교육 경감 (단기 정책)

- 공교육의 전문성 확대를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함.
 - 사교육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수준의 중·고등학교 전문 진로·진학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두에게 양질의 진로·진학 지도를 수행함.
 - 대학별 입학상담센터 전문화와 활성화와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의 이용자 편의 기능 강화를 통해 학생·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세부적 입시 자료를 공공의 영역에서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공함.
 -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학교별 교육과정의 특징과 입학 요강 등이 입시 준비를 하는 학생·학부모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통합 채널 구축함(고입정보포털 등).
- 공교육 기관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는 방안을 확대함.
 -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방과 후 학교에 남아 공부하고 싶은 학생을 위해 공간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저녁 급식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확대함.
 - 공공 인터넷 교육 사이트 강화(EBS 학습 콘텐츠 다양화, 문제은행 기능강화, 온라인 질의응답 서비스 운영 등)로 사교육 비용을 절감함.
 - 교육청 및 지자체와 연계한 학교 밖 공공 학습센터 운영(학교 여유 공간 또는 폐교 등을 자기주도학습관으로 활용하여 퇴직 교원, 발령 대기 중인 예비 교사, 대학생 등을 교사로 활용) 방안을 검토함.
 - 다른 학교 방과후학교 수업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공동 교육과정 확대로 학교 간 장벽을 허물어 방과후학교 학습의 영역을 확대함.

5) 대학 서열화 완화를 통한 사교육 경감

- 대학교육의 질 상향 평준화를 통해 대학 서열화 완화를 유도함.
 - 고착화된 대학 서열은 대학 입시경쟁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개별 대학 교육의 질을 상향 평준화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학 서열화 완화를 유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대학 서열화는 초·중·고 학생들에게는 과도한 경쟁 고통을 안겨주고 대학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며 지방 대학을 존폐의 위기로 내모는 원인이 되고 있음. 현재로서 소수에 불과한 좋은 대학, 가고 싶어 하는 대학,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양질의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대학을 더 늘려야 대입 경쟁과 사교육을 완화하면서도 고등교육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음. 이를 위한 핵심 동력은 재정의 확보로서, 가칭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을 통해 고른 재정 지원으로 대학 교육의 상향 평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대학입시 과열이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학벌주의와 연관되어 있는 만큼, 사교육을 완화하려면 대학 입학 정책의 자율성을 증진하여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특성화된 일류대학이 적극 육성되어야 함.
- 새로운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전문 실무분야 교육에 집중해서 실질적으로 취업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학들이 증가하여야 함. 지역대학 활성화는 산학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우선되어야 하고, 지역 문화예술의 수준을 높여 정주 여건을 고도화해야 수도권 집중화와 대학 서열이 완화될 것임.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 사교육 경감 특별위원회는 사교육 과열 현상을 완화하여 국민의 부담을 덜고, 공교육을 통해 교육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중장기적 전략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15명의 위원(위원장 성태제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으로 구성되어 2024년 8월 9일부터 2025년 8월 8일까지 1년 동안 활동함.
- 동 위원회는 그동안 총 13번의 회의를 통해 유·초·중등 교육에서의 사교육 및 사교육비의 변화 추이와 현황, 유형과 발생 원인, 영향과 결과, 기존 사교육 경감 정책의 성과와 한계 등에 대해 발제 및 토의를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사교육 경감 방안을 논의해 왔음.
- 이 보고서의 II장에서 학교급별로 살펴본 사교육 현황, 유형과 발생 원인, 영향과 결과 등에 대한 논의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가. 사교육과 사교육비의 변화 추이 및 현황

- 전반적으로 영·유아, 초등, 중등으로 올라갈수록 사교육비 총액이 증가함. 2024년 기준으로 사교육 참여율은 영·유아의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여 초등학교 시기에 가장 높았다가 중학교 이후 고등학교 시기까지 감소함.
- 그러나 1인당 사교육비는 학교급이 올라감에 따라 점차 증가하여 고등학교 시기에 가장 많음. 초·중·고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 학생의 사교육비는 2020년을 제외하면 2016년 전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과목별로 살펴보면, 영·유아 시기에는 영어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체육, 음악, 미술 순임. 기관 재원 유아보다 가정양육 유아, 특히 유아 대상 반일제 이상 학원(3시간 이상)에 참여하는 가정양육 유아의 1인당 사교육비가 매우 높게 나타남.
- 초등학교 시기에는 영어, 수학 및 체육 사교육 참여율이 매우 높음.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로는 일반 교과 사교육 지출 비중이 확대됨.
- 사교육 수강목적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돌봄 및 예체능 재능계발 비중이 감소하고, 학업 및 진학 준비 비중이 증가함. 예체능 재능계발 목적의 사교육은 영·유아부터 중학교 시기까지 높게 나타남.

- 영·유아의 경우에는 돌봄 목적의 사교육과 초등학교 입학 준비에 따른 불안 심리로 인한 사교육의 비중이 높은 특성을 보임. 초등학교 시기에는 돌봄 목적의 사교육과 함께 학교 수업 보충, 선행학습 목적의 사교육 비중이 높음. 중학교 시기에는 학교 수업 보충 및 선행 학습 목적의 사교육이, 고등학교 시기에는 학교 수업 보충과 함께 진학 준비 목적의 사교육 비중이 크게 증가함.
- 학교급을 불문하고 지역 규모가 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더 크며, 성적이 높은 고등학생이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경향을 보임.

나. 사교육의 유형과 발생 원인

- 사교육의 유형과 원인은 학교급별로 차이가 있으나, 학교급별 논의에서 언급된 사교육의 원인이 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사회·경제·교육적 경쟁의 심화 현상: 초·중등 학생의 대입 준비를 위한 사교육은 '경쟁'에 의해 발생함. 표면적으로는 시험 성적 경쟁이요, '명문대학' 입학을 위한 입시경쟁이 사교육의 원인으로 지적되지만, 더욱 근본적으로는 명문대학 졸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경쟁이 근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음. 사회·경제적 경쟁의 이면에는 '일자리'(선호하는 직장)와 '놀거리'(문화·예술 자원)의 수도권 집중 현상과 특정 직업에 대한 선호도 집중 현상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회구조적 과제의 해결은 교육 분야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범사회적·범부처간 협력적 접근이 필요함.
-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 의식 및 비교·서열 문화: 비교와 서열을 중시하는 사회문화적 분위기 및 자녀의 대입 경쟁 성공을 학부모 본인의 성공과 일체화하는 사회문화적 풍토에서, 자녀의 성적 경쟁을 위한 학부모의 노력이 치열함. 다양한 유형의 학부모 네트워크는 자녀 교육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긍정적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자녀의 성적 경쟁을 향한 학부모 간 대리 경쟁의 장이 되기도 함.
- 사교육 수요를 유발하는 학교 교육 실태: 평가 문항의 내용과 특성이 교육과정 및 수업과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갖는지에 따라 사교육 수요가 달라질 수 있음. 선택형 문항은 개념 학습과 사고력 함양을 중시하는 학교 수업을 소홀히 하고 정답 찾기 요령 위주의 사교육을 신뢰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학급당 학생 수와 교사 1인당 담당 학생 수가 많고, 교사의 업무 부담이 크다는 점은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personalized curriculum), 개별 맞춤형 수업, 개인의 능력에 부합하는 적응평가(adaptive assessment) 등을 어렵게 하는 요인임.

- ‘객관적 자료’ 중심의 대입 전형 정책: 평가의 주관성에 따른 사회정의 문제로 공정성을 강조함에 따라 오지선다형의 수능 점수의 비중이 높아짐. 학생부 전형일지라도 평가의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학생부의 기록 내용을 축소하고 학업성적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음. 학업성적도 선다형 문항과 객관화된 수행평가 결과에 의존하므로 교사의 평가권이 제한되고 있음. 이러한 ‘객관성’ 중심의 대학 입학 전형은 수능이나 내신을 위한 사교육을 조장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괴리되며, 교사들의 교수·학습·평가의 전문성과 권위를 저해함.
- 대입 정책의 복잡성과 불안정성: 대입 정책의 복잡성은 학부모와 학교의 진학지도를 어렵게 하여 ‘대입 컨설팅’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사교육 사업을 번성하게 함. ‘준비되지 않은 교육 정책의 집행’에 따라 거의 매년 변화되는 대입 정책의 불안정성과 일관성 결여 문제는 대입 정책의 복잡성 문제를 더욱 심화하고 결과적으로 사교육이 성행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사교육 기관의 전략과 상술: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사교육 기관의 ‘공포 마케팅’은 사교육의 보편화와 일상화 현상을 가져옴. 사교육 기관은 영유아 대상의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나, 초등학생 대상 의대 진학 준비 프로그램 등 새로운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해 가며, 대상 연령을 낮추어 가고 있음. 사교육 시장의 확대 이면에는 학교 교육이 해주지 못하는 것, 또는 부모가 해주지 못하는 것을 대신하여 충족해 준다는 전략이 자리 잡고 있음.
- 돌봄 수요에 의한 사교육: 앞에서 살펴본 입시경쟁 관련 요인과 구분되는 사교육 유발 요인은 돌봄 수요에 의한 사교육 수요임. 이러한 수요는 주로 유아교육 및 초등교육 단계에서 많이 발생하며, 맞벌이 가정은 물론 외벌이 가정에서도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돌봄 사교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

다. 사교육의 영향과 결과

- 사교육의 영향과 결과는 학교급에 따라 주목해야 할 측면에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언급된 사교육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학생의 심리적·정서적 부담 및 자기주도학습 능력 저하 문제: 과도한 사교육 프로그램 참여는 학생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음. 모든 것을 관리해 주는 사교육 경험에 의해 스스로 학습을 설계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며 노력하는 경험을 갖지 못함에 따라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저하됨. 과도한 사교육은 자녀의 인지적·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

-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 문제: 사교육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교육비 부담 문제로서, 사교육비 부담은 저출생 문제의 핵심 원인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음.
- 사교육에 의한 학교 교육 참여도 및 신뢰 저하 문제: 선행 사교육 참여 학생은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여 학교 수업을 소홀히 하게 되며, 이에 따라 정상적인 수업 운영이 어려워짐. 더 나아가 학부모가 비교육적인 수업 활동(조기 문자 교육, 문제 풀이 수업 등)을 유치원이나 학교에 요구함에 따라 공교육의 본질적 과제를 상실하게 하는 본말전도 현상을 가져올 수 있음.
- 사교육에 의한 저출생 현상 심화 및 사회적 불평등 심화: 사교육은 가정 경제에 부담을 주고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는 저출생 현상을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사교육은 또한 교육 격차를 심화하고 그 결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하며 계층 이동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라. 미래 교육 전망과 사교육 경감 정책의 기본 방향

1) 미래 세대 특성 및 미래 교육 변화와 사교육 전망

- 중장기 사교육 경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미래 교육에 대한 전망이 출발점이 되어야 함.
 - 알파 세대(2010년대 초반부터 2020년대 중반까지 태어난 세대)는 MZ세대와 달리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 사회 전반에 디지털화·개인화·참여형 문화 확산, 가치관 및 소통 방식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Prensky, 2022).
 -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대입 경쟁은 전반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명문대학이나 특정 인기 학과 및 전공에 대한 경쟁은 여전히 유지될 가능성이 있음. 학과나 전공에 대한 선호도에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나, ‘좋은 대학, 좋은 학과’를 향한 입시경쟁은 기본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 교수(teaching)보다는 학습(learning)이 중시되어 자기발견 학습(self discovery learning), 자기인식 학습(self awareness learning), 자기조절 학습(self adaptive learning)으로 전환되며, 학생이 학습의 주체로서 학습을 주도함.
 - 교육과정은 개별화 교육과정으로 전환되고, AI 디지털 교과서와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도입으로 맞춤형 교육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됨. 학습 내용은 교과별로 분절된 지식보다 융복합 지식이 강조되며, 지식의 습득을 넘어 지식을 활용하고 적용하며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내는 사고 및 탐구 역량이 강조될 것임.

-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인의 학습 특성을 분석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개별 맞춤형 교육이 학교 교육에서 활성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부족한 학습을 보완하기 위한 사교육 수요는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 초연계, 초지능, 초학제의 특징을 갖는 인공지능 시대에 교육평가의 방향은 ① 교육목표, 교육과정, 교수·학습과 통합된 평가, ② 단순지식보다는 융합지식, 창의성에 대한 평가, ③ 수행 중심의 역량 평가, ④ 지필평가를 벗어난 디지털평가, ⑤ 개인화 맞춤 평가의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평가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선택형 문항의 사용이 줄어들고 교육과정 및 수업과 연계된 수행평가 형식의 서술형·논술형 평가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이와 같은 평가의 변화는 문제 풀이 요령 중심의 입시 위주 교육을 넘어서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학교 수업의 변화와 학생의 학교 수업 참여도 증진을 가져올 수 있음.
- 인공지능 기술의 변화는 대입 전형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학습자의 학습 과정과 다양한 경험을 전형 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러한 자료를 AI가 분석함으로써 지원자의 특성이 대학별 인재상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됨.
- 미래 교육의 변화에 따라 사교육 수요가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사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
 - 사교육 시장 역시 온라인 플랫폼 활용, AI 튜터를 통한 맞춤형 콘텐츠 제공과 개별 피드백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교육 서비스로 빠르게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 학교 평가 방식이 서술형·논술형 평가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기존의 정답 찾기 중심 수업은 점차 줄어들고, 교육과정에 충실한 수업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큼. 이에 따라 단순 지식 전달에서 벗어나 프로젝트 기반 학습, 토론 학습 등 학생의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사교육도 변화할 가능성이 있음.
 - AI 소양과 디지털 역량이 강조됨에 따라, 코딩, 데이터 과학 등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사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으며, 개별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진로 교육 관련 사교육 시장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음.
 - 알파 세대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교육 시장에서도 AI·메타버스 기반의 맞춤형·참여형·체험형 학습이 강조될 가능성이 있음. 특히 공교육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 학습 분석과 피드백의 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고급 사교육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음.

2) 사교육 경감 정책의 기본 방향

- 사교육 경감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사교육 경감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사교육 유형의 다양성을 고려한 접근: 사교육 유형은 다양하며, 각 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 돌봄 수요에 의한 사교육과 입시경쟁을 위한 사교육을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사교육의 효과나 특성 측면에서 교육적인 가치가 있는 사교육과 비교육적인 사교육을 구분해 볼 수 있음. 모든 유형의 사교육을 일률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바람직한 교육적 요구를 외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사교육 과열 현상에 대한 근원적·원칙적·단계적 접근: 사교육 문제에 대한 ‘대증적 접근’은 한계가 있으므로 ‘근원적 접근’이 필요함. 이를 위해 대입 정책과 평가의 방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점검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대입 정책의 방향에 대한 기본 원칙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 국가(교육부)는 학교에 정착되지 않는 전형 요소를 대입 제도에 반영하도록 요구하지 않아야 함.
 - 대학은 초·중등 교육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입학제도를 자율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다만, 대학은 고등학교에서의 평가 내용에 근거하여 학생을 선발하도록 권장함.
 - 고등학교는 학교 교육에 충실하여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기하고 학생 평가를 공정하게 하여 타당하고 신뢰로운 대학 입학전형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대학 입학 정책 수립에 불간섭, 대학의 입학 정책 자율성 강화, 고등학교의 학교 교육 내실화 및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교육적 가치 중심의 접근: 정치·경제적 관점의 접근보다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학교 교육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춤. 수요자가 원한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문제 풀이 중심의 입시 위주 수업’ 등 교육적 원칙에 어긋나는 수업을 실시하도록 요구하지 않아야 함. 이와 함께 개별 맞춤형 교육, 소규모 학습 단위 구성에 의한 학습 참여도 제고 등 사교육의 긍정적 교육 효과를 공적 기관을 통해 수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공교육 환경 개선과 교사의 권위 회복을 중시하는 접근: 공교육의 실질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그 핵심 조건인 학교 교육 환경과 개선과 교권 회복을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학급당 학생 수 적정화와 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교원에 대한 처우 개선과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특히 교사의 평가 전문성 발달을 지원하고, 학교와 교사의 평가 자율성 및 권한을 존중하는 교육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야 함.

2 정책 제언

- 학교급별로 논의된 사교육 경감 정책 방안을 몇 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주요 내용을 종합·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가. 공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여건 조성

- 인성교육, 개념 학습, 창의적 사고력과 탐구 역량 함양, 사회·정서적 학습 등 학교 교육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사교육 수요를 억제함.
 -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를 높임으로써 맹목적인 사교육 의존 현상을 해소함. 다만, 유아기의 조기 영어 교육, 문제 풀이 요령에 초점을 맞춘 ‘입시 위주 교육’ 등 교육적 타당성이 결여된 사교육 수요를 학교가 흡수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학교 교육 본연의 가치와 역할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 미래 교육의 변화 전망을 고려하여 맞춤형 학습 체제를 구축함. 정해진 범위의 진도 중심의 교육과정을 넘어서서 개인별로 적합한 학습경로를 밟으며 성취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과정 구성 방안을 모색함.
-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양질의 개별 맞춤형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 적정화, 교사의 행정 업무 부담 경감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하며,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법제화 방안을 추진함.
 - 이와 함께 교원이 전문적 판단에 따라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보호정책을 강화함.
- 기초학력에 대한 학교의 책임을 강화하여 학업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조기에 확인하고 전문성을 갖춘 전담 교사가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구축함. 이를 통해 학습 결손에 따른 사교육 수요를 줄이고 교육 격차의 심화 현상을 해소함.

나. 미래 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시스템 구축과 개별 맞춤형 교육 강화

- 인공지능 기반 학습분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의 흥미와 관심, 능력, 학습 속도, 진로 계획 등 학생 개개인의 제반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의 개별화와 개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사교육 수요를 줄임.
 - 고도화된 인공지능 기반 공공 교육 플랫폼을 개발·운영하여 학생의 학습 준비도, 흥미,

학습 양식(학습 스타일 및 선호 학습 유형)을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학습 내용, 학습 과정, 학습 결과물, 학습 환경 등을 제공함으로써 개별 지도를 목적으로 하는 사교육 수요를 줄임.

- 인공지능 기반 공공 교육 플랫폼의 질적 수준에 따라 사교육이 제공하는 질 높은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교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학교 교육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 기술과 플랫폼의 질을 높이고, 교사의 에듀테크 활용 역량도 함께 강화해야 함.

- 미래 교육의 변화에 따른 사교육의 내용과 방식의 변화 방향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함.
 - 사교육 시장 역시 온라인 플랫폼 활용, AI 튜터를 통한 맞춤형 콘텐츠 제공과 개별 피드백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교육 서비스로 빠르게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변화 중에는 교육적으로 타당한 것도 있지만, 인공지능에 대한 과의존 현상 등 공교육에서는 사용을 억제하는 방안들도 무분별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 학생과 학부모의 인공지능 및 디지털 문해력과 윤리의식을 함양하여 비교육적인 인공지능 기반 에듀테크 활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함.

다. 돌봄 수요 등에 대한 공적 지원 강화

- 유아 및 초등 사교육 수요의 중요한 요인의 하나인 돌봄 수요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공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돌봄 목적의 사교육을 경감함.
 -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 대한 돌봄 수요가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공적 돌봄 프로그램을 확충함. 다만, 돌봄 프로그램 운영과 관리를 학교에 맡김으로써 교육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혼란과 부담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이를 위해 지자체 및 지역사회가 돌봄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도록 체제를 구축함.
 - 공공 돌봄 서비스 대상을 유아로 확대함. 유아 맞춤형 돌봄 인력과 시설을 확충하여 보호 중심의 돌봄이 아닌 발달 단계에 맞춘 놀이 중심·정서 지원 중심의 유아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함.
 - 유아 및 초등 돌봄 프로그램 운영에서는 ‘다양한 경험’에 초점을 두고, 학교는 물론 도서관이나 문화센터, 마을 교사나 지역 전문가 등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예술 활동, 체육 활동, 독서, 체험, 탐구 등 넓은 영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

- 사교육 문제의 해소를 위해 지자체 및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불필요한 사교육 수요를 흡수함.
 - 공공 인터넷 교육 사이트를 강화하여 학습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온라인 질의응답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교육적으로 타당한 사교육 수요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함. 다른 학교 방과 후학교 수업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공동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학교 간 장벽을 허물고 방과 후 학교 학습의 영역을 확대함.
 -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방과 후 학교에 남아 공부하고 싶은 학생을 위해 공간을 제공하고,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예를 들어, 교육청 및 지자체와 연계하여 학교 여유 공간이나 폐교 등을 자기주도학습관으로 활용하는 학교 밖 공공 학습센터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퇴직 교원, 발령 대기 중인 예비 교사, 대학생 등을 자기주도학습 지도 교사로 활용함.

라. 평가 패러다임의 혁신

- 선발 자료의 기초로서 상대적 순위 확인에 초점을 맞추었던 평가 관행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성취 수준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성장 지원에 초점을 맞춘 평가로 전환함으로써 상대적 석차 경쟁을 위한 사교육 수요를 줄임.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개별 맞춤형 수업의 활성화와 함께 학생 평가에서도 개개인의 강점과 부족한 점을 반영하는 개별화 평가를 활성화함. 모든 학생을 같은 시기에 같은 문항으로 평가하여 시험 성적을 비교해야 한다는 사고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부합하는 평가 과제를 통해 자신의 강점을 드러내고 부족한 점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둔 맞춤형 평가 모형을 개발하여 활용함.
 - 맞춤형 평가를 통해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수업과 평가가 서로 분리되지 않고 연계·통합될 수 있어야 함. 수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강점과 부족한 점에 대한 평가가 개인별 포트폴리오 기록으로 남아 학생의 성장 과정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 수업-평가-기록을 서로 연계하고 통합하는 시스템을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구축하여야 함.
 - 총괄평가의 맥락에서도, 평가를 위해 수업에서의 활동 과제와 다른 별도의 과제를 제시하기보다는 수업과 연계되는 과제를 통해 강점과 부족한 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시험 준비가 곧 공부요, 적극적인 수업 참여가 곧 최선의 시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단기적으로, 대학입시와 관련되는 고등학교 내신 평가에서 상대평가를 지양하고 성취 기

준에 근거한 절대평가를 정착함. 다만, 고교 내신 절대평가 개편 시 성적 부풀리기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므로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근거한 성취도 평정의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 방안을 모색함.

- 나아가, 학생의 성장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성장참조평가 모형을 개발하여 학교 교육 현장에 적용하거나 대학 입학전형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함.
- 평가 문항을 교육과정 및 수업과 일관성을 갖도록 개선하며, 이를 위해 선택형 문항을 지양하고 서술형·논술형 평가를 학교 현장에 확대함. 이를 통해 정답 찾기 요령에 초점을 맞추는 사교육 수요를 줄임.
 - 사교육은 시험 성적 점수를 향상하는 데 일차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이에 따라 교육과정 이 강조하는 개념 학습보다는 문제 풀이 요령에 집중하게 됨. 이러한 문제 풀이 요령 중심의 사교육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공부와 시험이 괴리될 수밖에 없는 선택형 문항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함.
 - 평가 문항 또는 평가를 위한 과제가 학생들의 확산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서술형·논술형 문항으로 개선될 경우, 공부와 시험의 괴리가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으며, 요령 위주의 사교육으로 효과를 거두기 어려움. 결과적으로 학교 수업에 충실하게 참여하는 것이 곧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되며, 따라서 사교육이 제공하는 요령의 습득만으로는 성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사교육 수요가 줄어들 수 있음.
 - 서·논술식 평가 상황에서도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한 사교육’ 수요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러한 사교육은 정답 찾기 요령을 지도한다기보다 실제 능력의 향상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아짐. 이와 같은 상황에서의 사교육은 어느 정도의 교육적인 가치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음.
 - 급격한 교육의 변화는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여 사교육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미래 사회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력, 협력적 문제해결력을 키워줄 수 있는 수업 및 평가 방식으로의 점진적 변화가 요구됨. 특히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높은 기대와 관심을 고려하여, 교사의 평가 전문성 함양을 지원하고 학교와 교사의 평가 자율성 및 권한을 존중하는 교육 공동체 문화 형성 및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마. 대입 전형 정책의 개선

- 사교육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대학 입학을 위한 시험 성적 경쟁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입제도의 개선은 사교육 경감을 위한 중요한 과제임. 대입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서는 고

등학교 교육과정의 충실한 이수를 중시함으로써 학교 수업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사교육 의존을 줄여야 함. 이를 위해 고등학교의 학생 평가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이를 대학들이 각 대학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 정착되지 않은 입학전형 요소(예: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행평가, NEAT, 논술형 등)를 반영하게 하는 대입 정책을 제시하지 않아야 하며, 획일적인 대학입시 정책 수립을 자제함. 교육부는 각 대학의 입학전형 정책이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되, 이 과정에서 각 대학 입학전형 정책에 대한 결과 타당도로서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효과와 명시적·잠재적 효과 등을 대학교육협의회나 독립적 단체 및 기관을 통해 분석·평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결정함.
- 각 대학은 자율권을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 그리고 중·고등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입학전형 정책을 수립함. 입학전형 정책은 고등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 경감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수립하며, 유·초등 교육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함. 각 대학은 자율권에 상응하여 학생 선발에 대한 무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합법성을 유지하여야 함. 이를 위해 전형 방법과 전형 요소 및 전형 결과를 공개하며, 입학상담실 운영을 통해 입학 상담이 상시적으로 가능하게 함(입학설명회, 개별상담 등).
- 고등학교는 학교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학생 평가 시스템을 학교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운영함. 평가의 공정성, 합법성 등 학생 평가를 책임 있게 시행하며, 결과를 공개함. 이와 함께 학생에 대한 진로·진학지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고등학교 교육이 대학이나 산업과 연계되도록 하며 학부모 대상 간담회 등을 통해 진학·진로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함.
- 평가 및 대입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은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예컨대 서·논술형 평가의 현장 정착을 위해서는 세밀한 계획에 따라 교사의 평가 문항 개발과 채점 기준 설정 및 채점에 필요한 전문성 함양을 지원해야 하며, 학부모가 이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교육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여야 함.
- 모든 학교급에서 동시에 추진하기보다는 대입과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실천하여 이를 고등학교로 확산해 가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외국의 여러 사례를 참조하여 단계적 추진 방안을 세밀하게 설계해야 평가 및 대입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실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고등학교의 평가 자율성 및 대학의 입학전형 자율성을 강조하는 방안에 대하여 평가 및 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학생·학부모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평가 및 전형 결과의 공개 등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제도를 구축함.

바. 편법·불법 사교육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 거짓·과대광고는 학부모의 사교육을 부추기며, 과도한 고액 사교육, 과잉 선행 사교육과 심야 사교육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학생들의 삶을 불행하게 하므로 억제가 필요함. 특히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조기 선행 사교육(‘영·유아 대상 영어학원’, 속칭 ‘영어유치원’ 포함)은 학습자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선행 학습으로 학습자의 인지적·정서적 발달에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모색되어야 함.
- 조기 선행 사교육은 사교육 기관의 과장 광고와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공포 마케팅 등에 의해 확산되어 많은 학부모가 맹목적으로 수용하고 있음. 조기 선행 사교육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피해를 학부모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하며, 필요시 해당 교육기관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예: ‘영어유치원’ 명칭 사용에 대한 관리 강화). 조기 선행 사교육에 대한 노출이 장기적으로 학습자의 정서적 발달 등에 미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편법·불법 사교육의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의 정책이 필요함.
- (불법·편법 사교육 기관 관리 감독 강화) 허위·과장 광고, 고액·심야·과잉 선행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해 학원법을 정비하고 사교육 관리센터를 설치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과도한 선행 교육의 법적 규제 마련) 학원 등 사교육 기관의 과도한 선행 교육은 학생에게 해롭고,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풍선 효과가 심각하므로 통상적인 예습을 넘어선 과도한 선행 교육에 대한 법률적 규제 방안 마련이 필요함.

사. 사교육 해소를 위한 범사회적 협력

- 사교육은 근본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 경쟁으로부터 발생하며, 그러한 경쟁이 ‘명문대학’ 경쟁을 위한 시험 성적 경쟁과 사교육 심화 현상으로 이어짐. 이러한 이유에서 사교육 경감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과제는 사회·경제적 지위 경쟁을 약화할 수 있도록 직역간·직장간 임금 격차와 지역 격차를 완화하는 것임.
- 국가적 차원에서 범정부적인 노력을 통해 직업 간 임금 격차 완화 방안을 모색하고, ‘일자리’(선호하는 직장)와 ‘놀거리’(문화·예술 자원)의 수도권 집중 현상 해소를 위한 지역 균형 발전 방안을 추진함. 또한 고등학교 졸업 이후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대학입시에 의해 평생 지위가 결정되는 현상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재도전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대학 서열화는 사교육의 원인이라기보다 경제·사회적 경쟁이 가져온 결과의 하나로 보아야 하지만, 고착화된 대학 서열에 따라 사회·경제적 자원이 불균형하게 배분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예를 들어, 블라인드 전형 등 출신 대학의 위상이 개인의 역량 평가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실천할 필요가 있음.
- 사교육 수요 중 돌봄 수요에 의한 사교육 경감을 위해 영·유아 학부모의 노동시간 감축, 유연근무제 등 돌봄 수요 지원 방안을 추진함.
- 이와 같은 사회구조적 과제의 해결은 교육 분야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범사회적·범부처간 협력적 접근이 필요함.
- 국가·사회적 수준에서 사교육의 실태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현실성 있는 사교육 모니터링 통계 조사 체제를 구축함.
 - 교육부·통계청이 매년 공개하고 있는 사교육비 규모는 초·중·고만을 대상으로 조사된 통계로서,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유아 및 N수생의 사교육 실태를 반영하지 못함. 현실성 있는 사교육 모니터링을 위해 유아 및 초·중·고와 N수생을 모두 포함한 사교육 통계 조사 체제를 구축하되, 기존 초·중·고 통계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조사 시기, 방법 등을 통일해야 함.
- 과잉 사교육과 조기 선행 사교육의 실제 결과와 문제점을 부모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실시하고 연구 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함.
 - 많은 학부모가 조기 선행 사교육이 자녀의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학습 흥미 저하, 스트레스 증가, 정서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존재함. 이러한 사실을 학부모가 이해하고 실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교육의 효과와 한계를 정확히 설명한 정보 제공과 교육이 필요함.
- 조기 선행 사교육이나 과잉 사교육 현상이 학부모의 불안감에 의해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하여, 올바른 자녀 교육의 방향에 대한 학부모의 진로·진학·학업 지도 전문가 상담 기회를 확대하고 지원함.
 - 학부모가 바람직한 교육관에 기초하여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자녀 교육 상담 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함. 이를 통해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는 건전한 에너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

참고문헌

- 교육부(2023.06.21.).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보도자료.
- 교육부(2023.06.26.). 사교육 경감 대책. 보도자료.
- 교육부(2011.12.14.).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 보도자료.
- 권순형·서무계·이강주·이희현·양희준·이정우·이진권(2024).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24). 한국교육개발원.
- 김영수·김현구·마동훈·박용수·성태제·양영유·옥현진(2024).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방향 및 비전 연구. 국가교육위원회, 제2023년-04호.
- 김은영(2025). 영유아 사교육 경험과 발달. 7세 고시: 유아부터 시작되는 사교육 전쟁. 정책간담회.
- 김은영·김근진·윤지연·김민지·정광희(2017).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Ⅲ):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김태훈(2025.02.05.). 사교육비 지출 증가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제37회 인구포럼, 저출산 고착화의 근본적 원인 탐색(pp.41-58).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
- 남궁지영(2024). 사교육 과열 현상, 해법은 없는가?. KEDI Brief, 제16호. 한국교육개발원. https://kedi.re.kr/khome/main/research/selectKediBriefForm.do?selectTp=0&board_sq_no=41&article_sq_no=35830
- 메디컬월드뉴스(2025.05.05.). 정신건강의학과 찾은 7~12세 환아들…4년 새 2배 이상 급증.
- 박명화·백일우(2020). 사교육 이해. 학지사.
- 박상준(2016). 불황터널 진입하는 한국 탈출하는 일본. 매일경제신문사.
- 서울신문(2024.08.11.). 어린이집 22% 폐원할 때 '영어유치원' 37% 늘었다…한달 교습비만 191만원.
- 서울경제(2025.07.08.). 끝내 1%대로 추락한 한국 잠재성장률…OECD 6개월 만에 0.1%p 끌어내려.
- 성태제(2019). 현대교육평가(5판). 학지사.
- 성태제·시기자·최윤정(2024). 생성형 AI 시대 교육의 변화와 교육평가의 향방. 교육평가연구, 37(1), 1-28.
- 성태제·임현정·전경희·최윤정(2025). 교육평가의 기초(4판). 학지사.
- 아시아경제(2025.02.27.). 유치원도 서울서 한 달에 1.5개 꼴로 폐원…2년 새 36곳 감소.
- 유진성(2023). 사교육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FKI인사이트(2023.12.19.). 한국경제인협회. https://www.fki.or.kr/kor/publication/globalInsight_detail.do?bbs_id=00035449&category=GI
- 이덕남·유지연(2022.04.28.). 초·중·고 사교육비 변화 추이 분석 및 향후 과제. NARS 현안분석, 247. 국회입법조사처.
- 이종재·장효민(2008). 사교육 대책의 유형에 관한 분석적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9(4), 173-200.
- 임소현·황준성·김은영·김혜진·백승주·김혜자·이정우(202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21). 한국교육개발원.
- 조태형(2023.12.). 한국경제 80년(1970~2050) 및 미래성장전략. BOK 경제연구, 제2023-25호. 한국은행.
- 통계청(2023.12.14.).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보도자료.
- 통계청·교육부(2025.03.13.).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보도자료.
- 한성민·조덕상·이종연(2025). 대한민국 인구전략 수립 연구: 대한민국 인구전략 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5-10-02.
-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Plenum Press. <https://doi.org/10.1007/978-1-4899-2271-7>

- Khan, S. (2024). *How AI Will Revolutionize Education(Any Why That’s a Goog Thing)*. Brave New Words. 박세연(2025 역). 나는 AI와 공부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의 종말. RHK.
- Prensky, M. (2001). Digital Natives, Digital Immigrants. *On the Horizon*, 9(5), 1-6.
- Prensky, M. (2022). *Empowered!: Re-framing ‘Growing Up’ for a New Age*. Accomplishment & Imapct. 허성심(2023 역). 세상에 없던 아이들이 온다. 한문화.
- Ren, L., Kutaka, T. S., Chernyavskiy, P., Fan, J., & Li, X. (2020). The linear and nonlinear effects of organized extracurricular activities on Chinese preschoolers’ development.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60, 101845. <https://doi.org/10.1016/j.cedpsych.2020.101845>
- Shi, J., Yue, Y., Zhao, W., & Huang, Q. (2023). Toward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Impact of After-School Tutoring on Chinese Preschoolers’ Social Behavior. *Sustainability*, 15, 181. <https://doi.org/10.3390/su15010181>
- Vygotsky, L. S. (1978).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 (M. Cole, V. John-Steiner, S. Scribner, & E. Souberman, Eds.). Harvard University Press.